



주간 통일정세

2010-45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선군정치, 동북아 평화 기여”(11/1, 연합뉴스)

- 북한이 선군정치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했음을 강조하고 나서 김정은 후계 체제 이후에도 선군정치를 기치로 하는 통치 사상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
- 중국 연변(延邊)대학에서 개최된 ‘두만강 학술 포럼’ 분임 토의에 주제 발표자로 나선 리성진 김일성종합대 교수는 “(북한은) 선군정치를 국가 활동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정치적 동란이나 사회적 불안 없이 고도의 안정을 꾀할 수 있었다”고 주장
- 리 교수는 이어 “1994년 타결됐던 핵 문제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천안함 사태로 한반도 관계가 급랭했음에도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선군정치를 기치로 내세워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함.
- 그러면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막강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추어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며 “(북한이) 2005년 핵 보유 선언과 두 차례의 지하 핵실험을 진행, 전쟁 억제력을 확보함으로써 자주권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냈다”고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 그는 이어 “현실은 우리의 선군정치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효율적으로 담보하는 정치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제적인) 학술 교류를 더욱 강화, 선군정치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김정은 체제가 구축되더라도 선군 정치가 계승될 것임을 내비침.

● 北김정일·정은, 자강도 희천발전소 현지지도(11/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함께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통신이 전함.
- 김 위원장 부자의 공개 활동은 은하수관현악단의 ‘10월 음악회’ 마 무리공연을 관람했다고 통신이 2일 보도한 지 하루만임.
-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한 발전소 건설자들의 헌신적 투쟁에 의해 대규모의 희천발전소 건설을 2012년 이전에 끝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고 말했다고 밝힘.
- 이어 김 위원장이 희천발전소의 조압수조장(수력발전소에서 도수관의 수량과 수압의 급변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큰 통)을 완공한 인민



군 근위 제210군부대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고 덧붙였다.

- 이번 현지지도에는 김정은을 비롯,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홍석형(이상 당 비서 겸직), 김경희(당 부장 겸직)와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및 당 부장겸직), 박도춘·최룡해·태종수(이상 당 비서겸직), 국방위 국장들인 현철해·리명수가 동행

● **北신문, ‘김정일 부자’ 사진 도배…후계 띄우기(11/4,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조선중앙TV)**

- 연합뉴스는 북한이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보도매체 선전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노동신문 지면 소개’를 인용, 이날 노동신문은 발행면수를 10면(평소 6면)으로 늘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은을 대동하고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장을 현지지도(시찰)한 소식을 전하는데 10면 전체를 썼다고 밝힘.
- 실제로 이 신문은 1~2면을 글과 사진으로 편집하고 3~10면은 사진으로만 채웠다고 중앙통신은 밝힘.
- 조선중앙TV도 오후 5시 10분께 김 위원장의 희천발전소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사진을 이례적으로 145장이나 내보냄.
- 이 가운데 인물 사진이 86장, 시설물 사진은 59장이었는데, 인물 사진 중 김 위원장과 김정은이 함께 들어간 것이 13장, 김 위원장 없이 김정은한테 초점이 맞춰진 것이 8장 포함돼 있음.
- 김정은 위주의 사진들에는 그가 양손을 깎지킨 채 뭔가 설명을 듣는 모습(6장), 걸어가는 모습(1장), 웃으면서 손뼉을 치는 모습(1장) 등이 담겨 있음.
- 사진 속의 김정은은 또 김 위원장이 입은 것과 디자인, 색상이 똑같은 옅은 회색 점퍼를 착용
- 연합뉴스는 올해 들어 노동신문이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을 부각시키기 위해 10면 이상으로 증명한 것은 이밖에도 △4월 13일자, 김일성 종합대학 전자도서관 현지지도(10면 중 8면 할애) △5월 22일자, 함흥 룡성기계 현지지도(12면 중 9면 할애) △8월 26일자, 평양 곡산공장 현지지도(10면 중 6면 할애) △9월 29일자, 당대표자회 소식(10면 중 8면 할애) 4차례가 더 있었다고 보도

● **北광산노동자, 김정일에 편지…‘만경대가문’ 강조(11/6, 조선중앙방송)**

- 방송은 북한의 광산 노동자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고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만경대가문’을 언급하며 ‘대를 이은 충성’을 다짐했다고 보도
- 방송에 따르면 재령광산 종업원들은 지난달 5일 보낸 편지에서 “올해 쇠돌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할 데 대한 장군님의 지난 1월 4일



현지말씀을 9월 30일 현재로 완수한 자량을 안았다”며 “우리는 올해 안으로 3대혁명붉은기광산의 영예를 쟁취함으로써 만경대 가문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깃든 기업소의 영예를 만방에 떨쳐 나가겠다”고 밝힘.

- 이 광산의 종업원들은 또 “온 나라 가정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이라면서 “아버지 장군님, 사업에서 무리하지 마시고 찬바람 부는 광산길과 험한 생 눈길, 진펄길을 더는 걷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덧붙임.

● 北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사망(11/7,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조명록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6일 오전 사망했다고 보도
-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공동명의로 부고를 발표하고 “조명록 동지가 장기간 심장병으로 2010년 11월 6일 10시30분 82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했다”고 밝힘.
- 부고는 “조명록 동지는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미제에 의해 분열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했으며, 우리 당과 공화국의 대외적 권위를 높이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했다”고 평가
- 이어 당 중앙위와 중앙군사위, 국방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후계자 김정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등 북한 고위 인사 170명을 위원으로 망라해 대규모 장의위원회를 구성

● 北김정일, 중앙방송위·청년선전대 공연 관람(11/7,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청년중앙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였다고 보도하였지만 김정은의 동행 여부와 공연 장소, 정확한 날짜는 밝히지 않음.
- 이 통신은 “예술선전대원들은 공연무대에 시낭송 ‘백두산 3대 장군의 청년동맹’, 혼성중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혼성 2중창 ‘당을 따라 청춘들이 앞으로’, 무용 ‘우리 식이 좋아’ 등 여러 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올렸다”고 소개
- 김 위원장은 공연 관람을 마친 뒤 “청년중앙예술선전대는 새 세대들인 우리 청년들을 당과 혁명에 충실한 혁명의 후계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전선의 일익을 맡고있다”고 강조
-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최태복·홍석형(이상 당 비서 겸직), 김경희(당 부장), 강석주(내각 부총리)와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및 당 부장), 최룡해(당 비서) 그리고 리용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1비서 등이 동행



- 한편 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대내 라디오매체인 조선중앙방송 창설 65주년을 맞아 중앙방송위원회 종업원들의 예술소조공연도 관람했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공연 관람 후 만족을 표시하고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이 일어나는 역사적 시기에 기자, 언론인들의 심장이 불타야 천만군민의 정신력이 발양된다”며 과업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기남, 홍석형, 김경희, 장성택, 최룡해 외에 당 비서인 박도춘·태종수와 군대의 지휘성원이 동행

■ 김정일동향

- 11/ 1 김정일, 은하수 ‘10월 음악회’ 결속공연 관람 및 전체 창작가·출연자들에게 黨 중앙총 명의 「감사」전달(11/2, 중통)
- 11/ 2 김정일, ‘김영환’(양강일보사 부국장)과 ‘강영희’(문화성 책임심의회)에게 감사 전달(11/2, 중방)
- 11/ 3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11/3, 중통·중방)
 - 김정은(黨 중앙군사총 부위원장), 김기남·홍석형(黨 비서), 김경희(黨 부장), 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 박도춘·최룡해·태종수(黨 비서), 현철해·리명수(국방위 국장) 등 동행
- 11/ 7 김정일,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 김기남·최태복·홍석형(이상 당 비서 겸직), 김경희(당 부장 ”), 강석주(내각 부총리 ”)와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및 당 부장 ”), 최룡해(당 비서 ”) 그리고 리용철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1비서 등이 동행
- 11/ 7 김정일, 중앙방송위원회 예술소조공연 관람
 - 김기남, 홍석형, 김경희, 장성택, 최룡해 외에 당 비서인 박도춘·태종수와 군대의 지휘성원이 동행

■ 김정은동향

- 11/3 김정은, 김정일의 희천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 동행(11/3, 중통·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을 수반으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대표사회 정신을 높이 받들고 대고조전투장에서 혁명적 양양을 일으켜 강성대국 건설을 앞당기자”고 독려(11/1, 중방)



나. 경제

● 北학자 “라선 개발, 국제적 협력 절실”(11/1, 연합뉴스)

- 북한이 경제자유무역지구 건설을 추진 중인 라선지구에 대한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을 요청
- 중국 연변(延邊)대학에서 개최된 ‘2010 두만강 학술포럼’에서 북한 조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김상학 연구원은 ‘동북아지역 내 경제협력과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 주제의 발표 논문을 통해 라선지구 개발이 동북아시아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
- 김 연구원은 “(북한은)지난 1월 새로운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마련하는 등 외국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 라선지대 투자 관련 법률을 구체화하고 기존 법규도 현실에 맞게 수정했으며 라선을 특별시로 승격시켜 라선지대 개발과 관리에 대한 자율권을 대폭 부여했다”고 설명
- 그는 이어 “라선에는 2대의 헬리콥터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이 건설됐고 청진-라진과 라진-원정리 구간의 도로 정비, 남양-학송 구간 철도망 보수 등 교통망도 크게 개선했으며 세계 어느 곳과 통신할 수 있는 초고속 통신망도 설치돼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덧붙임.
- 김 연구원은 그러나 “1989년 라선지구를 경제무역지대로 꾸리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된 이후 지난 20여 년간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총체적으로 볼 때 응당한 수준까지 진척되지 않았다”고 자평
- 그는 “동북아 국가들이 지하자원 운송비 부담 등 경제 발전을 제약하는 문제점을 해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라선이 두만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 이어 “라선을 포함한 두만강 삼각주 개발은 막대한 자금과 기술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조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라선지대 개발을 위한 접경국들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
- 그러면서 “접경국 정부 당국이 라선지대 개발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국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
- 그는 “(북한은) 라선경제무역지대를 기반으로 대외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 각국과 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하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면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적극적, 지속적으로 라선지대를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北최영림 총리 방중…경협 행보 가속화(11/3, 교도통신; 흑룡강신문)**
 - 최영림 내각 총리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중국 동북지방을 방문하는 등 최근 북·중 경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북한 대표단의 방중이 러시를 이루고 있음.
 - 특히 최 총리는 지난 9월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된 당내 서열 3위의 고위 인사로, 새 지도부 발족 이후 최고위급의 방중이라는 점에서 주목
 - 교도통신은 중국은 류홍차이(劉洪才) 주북한 대사를 동행하게 하는 등 국가원수급 대접을 하는 것으로 전함.
 - 흑룡강신문은 최 총리가 지난 1일 하얼빈에서 지빙쉬안(吉炳軒) 헤이룽장(黑龍江)성 공산당 위원회 서기와 회담하고 2일까지 이틀간 하얼빈의 전기 기업과 제약기업, 농업연구소 등을 시찰했다고 보도

- **北최영림 총리, 창춘 방문(11/3, 흑룡강신문; 헤이룽장TV)**
 - 최영림 내각 총리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은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에 이어 지린(吉林)성 성도 창춘(長春)을 방문, 쑨정차이(孫政才) 지린성 서기와 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짐.
 - 신문은 창춘의 외교소식통들을 인용, 최 총리가 이날 오전 창춘의 난후(南湖) 호텔에 도착한 후 쑨정차이 서기와 회담을 했다고 전함.
 - 소식통들은 최 총리와 쑨정차이 서기 간의 회담에서 북한과 지린성 간의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
 - 헤이룽장TV가 최 총리를 수행한 방중단에는 로두철 내각 부총리와 김창룡 국토환경보호상, 황학원 도시경영상 등이 수행했다고 보도

- **北최영림, 지린성과 농업교류 집중 논의(11/4, 연합뉴스)**
 -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에 이어 지난 3일 지린(吉林)성을 방문한 최영림 북한 내각 총리가 중국과의 농업 교류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지린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최 총리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지린성 창춘(長春)에서 장더장(張德江)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쑨정차이(孫政才) 서기 등 지린성 간부들과 만나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 이 자리에선 특히 선진 농법 전수 등 북한에 대한 중국의 농업 지원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고 전함.
 - 최 총리 일행은 지린에서 1~2일 더 묵은 뒤 오는 5, 6일께 랴오닝을 방문, 산업 시설을 시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최 총리의 랴오닝 방문 기간에는 최근 단둥(丹東)을 거점으로 활발해진 북·중간 IT산업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 **최영림 北총리, 지린 산업시설 집중 시찰(11/5, 길림신문)**
 - 중국 동북지방을 방문 중인 북한의 최영림 내각 총리 일행이 지린(吉林)성의 산업 시설을 집중적으로 시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창춘의 소식통들은 “최 총리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오늘도 창춘(長春) 경제개발구 등 지린성 내 산업 시설을 시찰했다”고 전함.
- 이에 앞서 지난 3일 지린성에 도착한 최 총리 일행은 창춘 이치(一汽) 자동차와 창춘열차회사, 창춘농업박람회, 지린대학 등을 둘러본 데 이어 쑨정차이(孫政才) 지린성 서기가 주재한 지린성 경제 상황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길림신문이 보도
- 신문은 설명회에서 쑨 서기와 왕루린(王儒林) 지린성 성장이 최 총리 일행과 만나 중국의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 개방 선도구’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북·중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함.
- 쑨 서기는 이 자리에서 “양국 변경선 가운데 80%가 지린성 내에 있을 만큼 양측은 지리적으로 밀접하고 북한에 진출한 지린성 기업이 35개에 이르며 지난해 양측 무역액이 6억1천만 위안으로, 북한은 지린성의 4대 무역 동반자가 됐다”고 설명
- 최 총리도 “양국 고위층의 상호 방문으로 우호관계가 더욱 높은 단계로 양호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지린성이 거둔 성공적인 경험과 선진기술을 익히고 쌍방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최영림 北총리, 선양 이어 다롄 방문(11/7, 연합뉴스)

- 중국 동북지역을 방문 중인 최영림 북한 내각 총리 일행이 7일 오후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을 출발, 다롄(大連)으로 향함.
- 다롄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 총리 일행은 이날 저녁 다롄에 도착, 다롄 앞바다의 작은 섬 리조트인 방추이다오에 투숙하고 샤더런(夏德仁) 다롄시 서기가 주재하는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
- 최 총리 일행은 다롄 방문에 앞서 6일 선양에 도착, 산업 시설을 둘러보고 왕민(王珉) 서기 등 랴오닝성 간부들과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다. 군사

● 北, 알루미늄 어뢰 부품 만들어(11/3, 데일리NK)

- 매체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송향동에 위치한 ‘129호 공장’에서 북한 해군이 사용하는 알루미늄 어뢰 부품이 생산되고 있다고 보도
- 앞서 북한은 2일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공개장’을 발표, “우리 어뢰는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알루미늄 합금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계급이 만든 강철합금 재료로 만든 주체식 어뢰”라면서 ‘주체어뢰의 강철 합금편’을 한국과 미국에 넘겨줄 용의가 있다고 밝힘.
- 매체는 함경북도 내부소식통이 “청진 129호 공장만 해도 알루미늄을 이용해 탄체와 추진체를 제작하고 있다”며 “청진화력발전소로



- 들어가는 철로를 이용해 화물열차 1개 분량의 ‘알루미늄 껍’이 최소 분기마다 한 번씩 이 공장으로 공급되며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어뢰 부품은 다시 동서해안 해군 부대들의 ‘어뢰조종대’(어뢰 조립, 정비 담당 예하부대)로 보내져 그곳에서 최종 조립된다”고 말했다고 전함.
- 소식통은 또 “이 공장은 2급 기업소 규모로 노동자만 해도 2천 명이 넘는다”면서 “청진시 송평구역에서는 열 살짜리 아이들도 ‘우리 129호 공장에서 알루미늄 어뢰를 만든다’고 자랑할 정도”라고 덧붙임.
 - 이 공장은 북한의 군수경제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군수품 제조 공장으로 탄체와 추진체 등 어뢰 부품을 특화 생산하며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조선인민경비대’와 이 공장 ‘노동적위대’가 2중으로 경계를 서고 있다고 소개

라. 사회·문화

- **北주민증언, “북한선 요즘도 굶어죽는 사람 많아”(11/1, 연합뉴스)**
 - 북한 경제가 만 1년이 다 되도록 화폐개혁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해 요즘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는 북한 주민의 증언이 나올.
 - 또 지난해 북한 내부에서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 후계자 김정은 찬양가 ‘발걸음’ 가사에 처음부터 ‘김정은’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
 - 북한민주화운동본부(대표 김태진)가 기자회견을 갖고 육성녹음과 함께 공개한 ‘북한주민 증언자료’에 따르면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장사를 하러 중국에 나온 이소라(65, 여, 가명)씨는 “화폐개혁 이후 문제가 많아 책임자(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 추정)를 처형했다”면서 “하지만 아직 물가가 심하게 오르내리는 등 경제가 좋지 않아 한 달에 한 두 번은 굶어 죽은 사람을 볼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밝힘.
 - 또 김순미(62, 여, 가명)씨는 화폐개혁에 대한 북한 당국의 사과와 관련, “인민반회의에 당 간부가 나와 ‘개혁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나. 악전고투하면서 고난의 행군을 타개해 나가자’고 설득했다”고 전함.
 - 김씨는 이어 대북 전단에 대해 “조선(북한)에서는 그런 걸 ‘적지물’이라고 하는데 원산까지 풍선처럼 날아온다고 들었다”면서 “당국에서는 적지물에 든 것을 먹으면 내장이 못쓰게 된다면서 절대 만지지도 말라고 선전한다”고 말함.
 - 평안도 출신의 김순이(43, 여, 가명)씨는 “(후계자) 김정은을 ‘셋별장군’으로 칭송하는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널리 퍼졌는데 가사에 ‘김정은 대장이 가시는 곳마다’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었다”면서 “누가 (세습을) 하든 우리 생활에 달라질 것은 없고 불평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임.
 - 반면 이소라씨는 “친한 사람들 사이에선 (김정은처럼)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과연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말이 오간다”고 말함.

- 김상철(가명)씨는 “재작년부터 (북한) 내부 통제가 대폭 강화돼 범죄가 더 심해졌다”면서 “나라가 못 살면 밀수라도 해야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못하도록 사회를 더 조였기 때문”이라고 주장
- 이 단체를 위해 일하는 이지혜 변호사는 “자료에 인용된 북한 주민 10명은 지난 5월과 9월 장사나 관광을 목적으로 중국 옌지(延吉)에 갔다가 우리 인터뷰 요청에 응한 사람들”이라면서 “현재는 모두 북한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함.

● 평양시내 김정은 비판 뼈라 등장(11/2, 아사히신문)

- 신문은 북한 평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을 살핀 꿈에 빗대어 비판한 전단(뼈라)이 출현했다고 보도
- 북한과 중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을 풍자한 반체제 뼈라가 지난달 하순 평양에서 발견됐다고 전함.
- 신문에 따르면 뼈라는 평양시내 공장 등의 벽에 붙여져 있었으며 “3마리째 꿈이 출현했다. 당신이 똥똥해지면 우린 야원다” 등의 내용이 쓰여 있음.
- 뼈라의 게시 방법 등으로 미뤄볼 때 북한 내 불만 세력이 유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안부대가 현장 일대를 봉쇄하고 주민들을 살살이 조사하고 있다고 전함.

● 北철도부패 극심…암표값, 정상가 20배(1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철도당국의 부패로 정상적으로 발매된 열차표를 구하기 어려워 암표가 국정 가격의 최고 20배에 팔리고 있다고 RFA가 보도
- 방송은 중국을 자주 오가는 북한 주민들의 말을 인용, “역에서 조직적으로 표를 빼돌려 암표로 팔기 때문에 승차권을 국정 가격으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면서 “평양-신의주 구간의 열차 요금은 국정 가격으로 대략 500원 내지 600원인데, 암표 값은 1만원 내지 1만 3천원이나 한다”고 말함.
- 평양 주민 이모씨는 “매달 한 번꼴로 중국에 갈 때 평양-신의주 구간은 열차를 이용하는데 단 한 번도 국정 가격으로 표를 사본 적이 없다”면서 “암표 값이 국정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것은 철도 요원들의 부패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말함.
- 다른 평양 주민 류모씨는 “화폐교환 이후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열차표의 국정가격을 조정하지 않은 것도 암표 값 폭등에 일조했다”면서 “철도 암표가 너무 비싸 차라리 ‘씨비차’(돈벌이에 이용되는 기관·기업소 차량)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전함.
- RFA는 “휴가철이나 명절 때 암표 장사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일이지만 암표 값이 정상 요금의 20배나 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암표 한 장 값이 북한 노동자의 3~4개월치 임금과 맞먹는 셈”이라고 덧붙임.



- 러시아 北별목장서 마약 밀거래 기승(1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러시아 내 북한 별목장이 마약 밀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RFA가 보도
 - 방송은 라진·선봉시 두만강 노동자구의 철도 관계자 전언을 인용, “러시아 별목 노동자들이 마약을 몰해 만들어 현지인들에게 팔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비밀 아닌 비밀”이라면서 “러시아에 가면 마약을 팔아 목돈을 챙길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마약제조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간부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별목노동자로 나가고 있다”고 전함.
 - 이 관계자는 “10월 16일 히로뽕을 만들어 러시아인과 동료 별목공들에게 밀매한 혐의로 별목노동자 6명이 현지 보위부에 체포돼 러시아 하싼발 두만강행 화물열차로 압송됐고, 8월에도 마약관련 범죄로 별목공 16명이 끌려왔다”고 전함.
 - 러시아 별목공 출신의 함경북도 주민도 이 방송에 “러시아 별목장의 마약밀매꾼들은 현장 보위부원에게 뇌물을 챙겨주고 러시아 마을에 드나들며 마약을 판다”면서 “1등급 마약은 러시아와 중국 마약조직에 팔아넘기고, 불량품은 동료 별목공들에게 판다”고 전함.
 - 이 주민은 또 “러시아의 추위와 고된 노동, 배고픔에 시달리다 보면 마약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지에서 히로뽕 1g이 30달러에 팔리는데, 온갖 고생을 다하고도 마약에 중독돼 무일푼으로 집에 돌아오는 사람이 적지 않고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임.

- 北방송, 김정은 보도에 높임말 사용(11/4, 교도통신; 지지통신; 조선중앙TV; 평양방송)
 -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은 일본의 북한뉴스 전문 취취기관인 라디오 프레스를 인용해 북한 공식 매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인 김정은의 동정을 전하면서 높임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보도
 - 조선중앙TV는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 부자의 동정을 전하는 기록 영화를 방영하면서 “부주석(귀보숨을 지칭)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인 김정은 동지께 선물을 드렸습니다”라고 표현
 - 귀보숨(郭伯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이끄는 고위 군사대표단이 지난달 25일 김 위원장과 김정은을 만난 사실을 전할 때 김정은의 이름 뒤에 ‘에게’ 대신 ‘께’라는 높임말 표현을 붙였다는 것
 - 또 중앙TV와 평양방송은 지난달 29일 방송에서 ‘(해외) 통신·신문·방송들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인 김정은 동지께서 군중 대회에 (김 위원장과) 함께 참석하신 데 대해서 보도했습니다’라며 또 한 번 ‘께서’나 ‘참석하셨다’는 등의 높임말 표현을 사용함.
 - 북한 공식 매체는 그동안 고(故) 김일성 주석과 김 주석의 삼촌인 김형권, 김 위원장, 김 위원장의 생모인 김정숙 등에 대해 ‘께’나 ‘께서’ 등의 높임말 표현을 사용했고, 김정은 동정 보도에선 단순히 ‘조



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 동지'라고 이름을 열거하는데 그침.

● **北, 한국제품 금수령…위반자 엄중처벌(11/4,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한국산 제품 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들어가다 적발되면 혹독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연변(延邊)지역 대북 무역상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 지난 5월 한국 정부가 대북 교역 중단 조치를 내린 이후 한국산 제품 수입 금지령을 내렸으며 무역 업자들과 유착한 지방 세관원들이 한국산의 반입을 묵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관 검열도 대폭 강화
- 한 대북 무역상은 “중국에서는 가격 차이가 크지 않지만 북한 주민들은 성능이 우수한 한국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국제품보다 서너배 이상 비싸게 팔려 민간 무역상들이 선호했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 단속이 대폭 강화돼 한국산을 반입할 수 없게 됐다”고 전함.
- 그는 “이달 초 지방 세관의 묵인으로 한국산을 몰래 반입해 시중에 판매한 라진의 한 무역상이 적발됐는데 하룻밤 새 온 가족이 사라졌다”며 “주민들 사이에 노동교화형을 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함.
- 또 다른 대북 무역상은 “지난 여름 중앙에서 북·중 접경지역 세관에 대한 지도 검열을 벌인 데 이어 최근 또 검열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좋은 관계를 맺어 물품 반입에 융통성을 보였던 세관원들도 ‘어쩔 수 없다’며 엄격하게 단속, 민간 무역상들의 북·중 무역이 위축됐다”고 전함.
- 이어 “남북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 올 들어서는 단속이 워낙 엄격해져 무역상들이 한국산 반입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산을 들여가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임.
- 이 무역상은 “화폐 개혁 실패 이후 북한 당국의 시장 단속이 느슨해졌고 배급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민 대부분이 장사에 나서고 있지만 민간 무역상들에 대한 단속 강화로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물가가 급등했다”고 설명

● **北당국, ‘남조선풍’ 옷차림·화장 등 단속(11/4, 데일리NK; 열린북한방송)**

- 북한 당국이 이른바 ‘남조선풍’으로 불리는 옷차림과 요란한 화장, 미신행위 등까지 ‘비사회주의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보도
- 이 매체는 평양에서 북·중 국경부근 도시에 나온 내부 소식통을 인용, “인민반 강연에서 ‘씩어빠진 생활양식이 판치면 사회를 쪼먹고 나라의 미래까지 망친다’는 강연과 함께 소위 ‘남조선 날라리 풍’을 단속한다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함.



- 이 소식통은 “자본주의 사회 문화는 사람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온갖 사회악을 만들어 내는 썩어빠진 생활양식이라고 선전한다”면서 “보안원(경찰)들이 직접 나서지는 않고 규찰대들이 거리에서 이색적인 몸단장 등에 대해 경고하거나 단속하고 있다”고 말함.
- 소식통은 또 “옷차림 외에도 점을 보거나 동물 모양의 인형을 판매하는 것을 미신행위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있다”면서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MP3 같은 걸로 남조선이나 외국 노래를 듣는 것도 불시에 단속을 하지만 아이들이 기술이 좋아 단속을 해도 금새 노래를 바꿔 놓기 때문에 단속 효과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밝힘.
- 한편 열린북한방송은 이날 양강도 혜산시 소식통을 인용, “10월 말경 혜산 세관에서 대장금 등 남조선 드라마 CD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짐 속에서 다량 적발됐다”며 이에 따라 “요즘 혜산 세관에서 중국과의 모든 무역과 친척방문을 하지 못하게 조치하고 강력한 당 검열과 보위사령부, 국가 보위부의 검열이 높은 강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함.

● **북한 기대수명, 2년 사이 7.4세 줄어(11/5, 미국의 소리(VOA))**

-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반대로 북한의 기대수명은 급격히 짧아지고 있다고 VOA 방송이 CIA(미국 중앙정보국) 자료를 인용해 보도
- 방송에 따르면 CIA는 지난달 27일 자체 인터넷홈페이지의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서 북한 관련 자료의 주민 기대수명을 평균 64.13세(여 66.9세, 남 61.5세)로 수정
- 이는 2008년의 평균 71.5세(여 74세, 남 69세)에 비해 7.4세(여 7.1세, 남 7.5세) 줄어든 것으로, 전체 조사대상 233개국 중 171번째
- 이 ‘기대수명’을 적용하면 올해 북한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평균 64세 정도까지 산다는 의미

● **北, 사적인 모임도 통제…후계비난 봉쇄 목적(11/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비난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친목회 등 사적인 모임까지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RFA가 보도
- 함경북도 국경지역 주민 김철만(가명)씨는 이 방송에 “보위부 지도원을 하는 형한테 ‘동창회나 친구모임에서 정치적 발언을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요즘 보위부에서 학교 동창회 같은 친목 모임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한다”고 말함.
- 최근 중국으로 나왔다는 한 탈북자도 “며칠 전 당비서가, 사람들이 모여 수근대는 것을 보고 ‘일심단결을 쪼먹는 종파주의와 같다’고 지적했다”면서 “이 당비서는 또 생일, 돌잔치, 제사 때 술판을 벌이는 것도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며 다 없애라고 했다”고 방송에 밝힘.



- RFA는 “이처럼 사적인 모임까지 단속하는 이유는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김정은의 유일 영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주민들의 대화공간을 전혀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함.
- 한편 북한군 출신 탈북자들로 구성된 ‘북한인민해방전선’은 이달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북한군 내부적으로 장교, 일반 사병을 불문하고 개인적인 친소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힘.

● 北, 새 형태 고구려 돌무덤 발굴(11/6, 조선신보)

- 신보는 북한 황해북도 연탄군에서 2개의 주검칸(널방)을 하나의 천장으로 덮은 새로운 형식의 ‘돌칸흙무덤’(석실봉토분) 1기가 발견됐다고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 사회과학원 소속의 고고학자들은 황해북도 연탄군 문화리에서 서남쪽으로 1km가량 떨어져 있는 저수지 북쪽 기슭 능선 중턱에서 이 무덤을 발견, 고고학자들은 “이 무덤은 한 칸처럼 지은 널방에 세로 220cm, 가로 108cm, 두께 16cm의 돌판을 세워 두 칸으로 나누었다”면서 “천장 하나에 각기 무덤안길(널길)을 갖춘 2개의 널방을 축조한 것은 매 칸의 천장을 따로 만드는 고구려 시기의 무덤에서는 보기 힘든 축조방식”이라고 지적
- 이들은 “새로 발견된 무덤의 널길, 널길 천장 형태, 널방의 바닥상태, 벽을 쌓은 형식은 고구려 시기의 일반적인 석실봉토분과 같다”면서 “이 무덤의 독특한 구조형식이 고구려 시기 무덤 축조 방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임.

● 北, 컴퓨터 범죄에 골머리(11/7, NK지식인연대)

- 단체는 북한에서 컴퓨터 보급이 늘고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해킹이나 문서위조 등 관련범죄가 늘어 당국이 이를 막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보도
- 이 단체는 지난해 출판된 ‘북한사법일꾼을 위한 참고서’를 입수해 북한 내에서 일어난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전자문서 조작 등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 사례를 소개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 제6부 제작(11/1, 중통)
 - 北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圖書 ‘광명백과사전’ 제2권 출판(11/1, 중통)
- 北 대동강식료공장·강계기초식품공장·평양화장품공장 등 식료일용공업부문 노동자·기술자들의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 성과” 보도(11/3, 중통)



2. 대외정세

- **북한군 총참모장 리영호, 쿠바 방문(11/1, 조선중앙방송)**
 - 북한군 총참모장 리영호(당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직)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군사대표단이 지난달 29일 쿠바 수도 아바나에 도착, 알바로 로페스 미에라 쿠바혁명무력 총참모장의 영접을 받았다고 방송이 뒤늦게 보도
 - 북한군 총참모장의 쿠바 방문은 지난 2004년 11월 김영춘 당시 총참모장(현 인민무력부장)의 방문 이후 6년 만임.
 - 리 총참모장의 쿠바 방문은 지난 4월 미에라 총참모장을 단장으로 한 쿠바혁명무력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회담을 갖고 양국 군대간 친선증진을 다짐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답방 성격인 것으로 보임.
 - 이날 안토니오 마세오 장군 기념비 앞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리 총참모장은 쿠바혁명무력 육·해·공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했으며 마세오 장군 기념비에 헌화했다고 방송은 전함.
 - 또 북한 군사대표단은 쿠바혁명무력부에서 마련한 연회에 참석했고 쿠바혁명무력 부대를 비롯한 여러 곳을 참관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北최태복, 인권문제 논의차 내년초 영국 방문(11/2, 자유아시아방송(RFA))**
 -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국회의장 격)이 내년 초 영국을 방문, 의회와 사법체계를 살펴보고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RFA가 전함.
 - 지난달 22~27일 북한을 방문한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은 RFA와 인터뷰에서 “방북 기간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입국 거부 등의 문제를 북한 측에 제기했다”면서 “최태복 의장이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 영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북한은 2001년과 2002년 유럽연합(EU)과 ‘인권대화’를 가진 바 있고, 작년 10월에는 김춘국 외무성 국장이 스웨덴을 방문해 자국의 인권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음.

- **주러 북한 대사가 기자회견 한 까닭은(11/5, 리아노보스티통신)**
 -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4일 러시아 언론들을 상대로 모스크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천안함 침몰사건과 무관함을 다시 한번 주장
 - 북한 대사가 현지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임.
 - 통신에 따르면 김 대사는 회견에서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이 밝힌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공개장’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은 이 사건



과 관련이 없고 북한 연관설은 남한과 외국에서 여론을 오도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는 기존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

- 특히 그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북한은 다른 나라와 달리 어뢰를 강철합금으로 만든다며 미국과 남한에 강철합금 샘플을 넘겨 줄 수 있다는 ‘진상공개장’의 제안을 반복함.
- 이날 기자회견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도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자신들에게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北, “천안함 관련 어뢰표본 제공 용의”(11/6, 베이징 로이터)

- 북한이 천안함 침몰 진상조사에 협력하겠다고 거둬 어뢰 재료인 강철합금 표본을 남한과 미국 측에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정현우 선임 참사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천안함 사태와 관계없다면서 “애초 현장조사 후 과학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었다”고 말함.
- 정 참사는 특히 강철합금 샘플을 남한과 미국에 제공할 뜻이 있다면서 미국의 천안함 조사는 “순전한 날조이자 음모극”이라고 비난
- 한편, 스위스 제네바 주재 서세평 북한 대사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군과 남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미국이 천안함을 구실로 협상 재개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

● 北, 뉴질랜드서 쇠고기 사려다 17만佛 동결(11/6, 데일리NK)

- 매체는 북한의 관광을 총괄하는 ‘묘향지도국’이 지난달 뉴질랜드에서 관광버스 부품과 쇠고기를 구입하려다가 구매자금 17만달러를 동결당했다고 보도
- 이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묘향지도국은 일본 정부의 제재로 관광에 이용되는 일제(日製) 버스의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뉴질랜드의 한 파트너에게 수입 대행을 부탁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뉴질랜드 정부가 돈을 입금한 묘향지도국의 라트비아 비밀계좌를 의심해 구매자금을 동결했다”고 전함.
- 이 소식통은 “동결된 돈도 문제지만, 라트비아 계좌가 들통난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묘향지도국은 라트비아 소재 C은행에 ‘RUSKOR International Ltc’라는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했는데, 이는 러시아(RUS)와 코리아(KOR)의 합성어”라고 밝힘.
- 한편 이 소식통은 “수입 물품 품목의 쇠고기는 내년 청년대장(김정은) 동지의 생일(1월 8일)에 맞춰 간부들에게 ‘특별 공급’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번 일로 차질이 생길까 봐 묘향지도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전함.



■ 기타 (대외 일반)

- 일본의 잠수함증강계획(2015년까지 22척 보유) 발표 및 '자위대'의 인도양 급유활동 부활 움직임 등은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책동이 실천 단계에서 맹렬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국제사회의 對日경계 강조 ‘논평’ 발표(11/1, 중통)
- 유엔총회 제65차 회의 3위원회회의 ‘對北인권문제’(인권담당 특별보고자의 訪北 허용 등) 거론 관련 “공화국의 내정에 함부로 칼질하려는 것은 자주적 주권국가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행위”라며 “사회정치체도를 허물어 보려는 비열한 모략책동”이라 주장(11/2, 중통)
- 日 의원 66名の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참배(10/19) 관련 “과거죄행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고 침략역사를 왜곡시켜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책동”이라고 비난(11/2, 중통·민주조선)
- 美國의 2011년도 국방예산 증액, 공화당의 중간선거 공약(北, 이란 등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한 미사일방위계획 수립) 등을 “전 세계를 군비경쟁의 場으로 만들려는 흉계”라고 비난하며 反美투쟁 선동(11/1~2, 평방)
- 北, 이란 위협에 대비한 미국주도 NATO 등 참여 ‘미사일방위체계수립’ 움직임을 “군비증강책동 합리화, 힘에 의한 세계제패 야망실현을 위한 범죄적 책동”이라고 비난(11/3, 중통·노동신문)
- 김영남과 박의춘(외무상), 訪北 WFP 집행국장 일행과 각각 담화(11/3, 중통)
- 김영일(黨 비서), 駐北 스웨덴 대사 ‘바르브로 엘름’과 담화(11/3, 중통)
- 北·쿠바 군사대표단 회담, 쿠바 아바나에서 진행(11/4, 중통)
 - 쿠바 내각 수상 ‘라울 카스트로’, 11.3 北 군사대표단(단장 : 리영호 총참모장)과 담화 및 김정일에게 선물 전달(11/4, 중통)
- 日 ‘오끼나와’ 駐日美軍기지를 “조선침략을 위한 미제의 출격·중계·보급기지”라고 再次 비난(11/4, 평방)
- 양형섭, 駐北 인도네시아 新任 대사 ‘여운 나스리 구스따만’과 담화(11/4, 중통)

3. 대남정세

● 6.15북측총 “개성서 16일 만나자”(11/2, 연합뉴스)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남측위원회에 오는 16일 개성에서 접촉을 갖자고 제의해온 것으로 확인
- 대북 소식통과 통일부 등에 따르면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는 1일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앞으로 보낸 팩스에서 “귀 본부에서 11월 16일 접촉하자는 제의에 동의하며, 실무 접촉은 개성에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밝힘.
- 이는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가 지난달 20일 팩스를 통해 “적당한 시기에 접촉을 갖자”고 제의한 데 대해 남측위원회 언론본부가 지난



달 말 “11월 16일 개성이나 중국 선양에서 접촉을 갖자”고 화답한 데 따른 것임.

- 북측위는 당시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언론인 본연의 사명에 맞게 통일언론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자”며 접촉을 제의
- 북측의 ‘16일 개성 접촉’ 제의에 대해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관계자는 “북측으로부터 정식으로 초청장을 받아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함.

● 北, 천안함사건 ‘진상공개장’…기존논란 재론(11/2,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남측 민군합동조사단의 최종보고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공개장’을 발표
- 국방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남측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반박한 바 있지만 국방위 검열단 명의로 ‘진상공개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임.
- 통신에 따르면 국방위 검열단은 이 ‘진상공개장’에서 어뢰추진체의 ‘1번’ 글씨, 물기둥 형성, 알루미늄 흡착물, 좌초 가능성, TOD(열상 감시장비) 동영상 등을 둘러싼 기존의 논란을 대부분 다시 거론한 뒤 우리 측 조사결과에 대해 “황당무계한 날조극”이라고 주장
- 검열단은 그러나 남측 조사단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알루미늄 합금 금속파편’에 대해 “우리 어뢰는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알루미늄 합금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계급이 만든 강철합금 재료로 만든 주체식 어뢰”라면서 “지금도 우리 주체어뢰의 강철 합금편을 미제와 역적패당에게 직접 넘겨줄 용의가 있다”고 밝힘.
- 검열단은 또 ‘1번’ 글씨과 관련, “우리 군수공업 부문에서는 어떤 부속품이나 기재를 만들 때 필요한 숫자를 펜으로 쓰지 않고 새기고 있다”면서 “그 경우에도 ‘번’이 아닌 ‘호’를 붙여, ‘1번’ 표기는 우리의 통상적인 표기방식이 아니다”라고 주장
- 이어 “미국과 역적패당이 천안호 사건을 떠들어대면서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광분하면 할수록 우리는 2차, 3차로 날조극의 정체를 까밝힐 것”이라고 말함.

● 北, 남측 기자들 상봉 취재에 ‘과민반응’(11/4, 공동취재단)

- 통신은 이산가족 ‘2차상봉’ 둘째 날인 4일 남측 기자들의 취재에 북측 관계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해 곳곳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보도
- 오전 비공개 ‘개별상봉’에서 북측 가족에게 클라리넷을 연주해줄 예정이던 남측 가족을 금강산호텔 앞에서 촬영하려고 하자, 북측 관계자가 “합의 위반”이라며 제지하고 나섬.
- 남측 기자들은 이에 “개별상봉은 비공개이지만 호텔 앞과 로비까지는 촬영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결국 촬영은 무산



- 모 방송사 카메라기자는 북측 안내원의 에스코트를 받아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주변 경치를 찍던 도중 다른 북측 관계자가 “군부대가 찍혔다”며 막아 결국 촬영도 못하고 앞서 찍은 부분도 모두 삭제 당함.
- 북측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군의 항의를 받았다면 이 카메라기자가 촬영한 원본을 재확인했고, 이에 해당 기자는 우리 당국자와 대한적십자사 측에 “허기받고 찍은 촬영분까지 검열하는 것은 문제”라고 항의
- 또 개별상봉에서 북측 동생에게 밥을 지어주겠다고 쌀을 가져온 오성근씨를 남측 기자들이 취재하려 하자 북측은 ‘개별상봉 전에도 선물은 촬영할 수 없다’며 사진취재를 막았음.
- 전날 오후 단체상봉 때도 우리 측 기자들이 북측 이산가족에게 말을 걸거나 질문을 하려다 북측 관계자로부터 제지와 방해를 받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함.
- 북측은 개별상봉에 앞서 “한 발자국도 방 밖으로 나오지 마라”고 말 해두는 등 상봉 행사에 참석한 북측 가족들의 언행도 제한함.
- 한 북측 가족은 ‘어제 (단체상봉에서) 왜 그렇게 뻗뻗하게 굴었느냐’는 질문에 “체제가 다른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보장성원’(지원인력)들이 밀착감시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남측 가족이 전함.

● ‘2차 상봉’ 종료…1·2차에 남북 830명 재회(11/5, 공동취재단)

- 지난 3일 시작된 이산가족 ‘2차 상봉’ 행사가 5일 재이별의 슬픔과 아쉬움 속에 마무리됨.
- 남측 상봉신청자 93명과 북측 가족 203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금강산호텔에서 ‘작별상봉’을 갖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 인사를 나눔.
- 남북 이산가족을 통틀어 최고령인 남측 김부량(97.여)씨는 일시적인 건강악화로 작별상봉 자리에 나오지 못해 전날 94명이던 우리 측 인원이 1명 줄음.
-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상봉장 곳곳에서 참았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비교적 감정을 잘 절제해온 북측 가족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슬픈 표정을 감추지 못함.
- 작별상봉이 끝난 뒤 호텔 밖 버스 7대에 분승한 남측 가족과 배웅 나온 북측 가족은 차창을 통해 손을 맞잡고 ‘고향의 봄’을 부르며 이별의 아쉬움을 달랠.
- 치매 증세가 있는 김정순(90.여)씨는 북측 딸 변춘광(60)씨와 헤어지는 순간 “같이 금강산 가는 거 아니었냐”며 울먹였고, 조운수(78)씨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100살까지 살 테니 오빠 걱정 마라”며 북측 여동생 명수(73)씨를 위로
- 북측 아들을 만난 지달수(93)씨는 “내 나이가 많아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고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할 수도 없지만 아들을 만난 것 자체가 큰 기쁨이었다”면서 “서로 통일이 되도록 노력



- 하자는 얘기를 했다”며 눈물을 흘림.
- 북측 상봉단의 최성익 단장(조선적십자회 부위원장)은 상봉 정례화 전망을 묻는 우리 측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그 문제는 연계되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남측에 전했다”면서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관광 재개 요구를 우회적으로 되풀이
 - 남측 가족들 가운데 일부는 “북한의 가족들이 ‘금강산관광이 빨리 재개돼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교육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가만히 듣고 있었다”고 전함.
 -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상봉행사에서는, 1차 남 436명, 북 97명, 2차 남 94명, 북 203명 등 모두 830명의 남북 이산가족이 60년만에 재회의 기쁨을 나눔.
- **北, 대남선전용 가요 내부에 퍼지자 단속(11/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남한 내에 퍼뜨릴 목적으로 만든 ‘대남 선전용’ 가요(이하 대남가요)가 내부에서 ‘체제 비판용’으로 역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북한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RFA가 전함.
 - RFA가 중국에서 접촉한 북한 간부는 “남한의 운동권이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민중가요를 활발히 만들지 못하자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최근 ‘대남가요’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고 밝힘.
 - RFA는 다수의 북한내부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이 대남가요 단속에 나선 이유는 남한 내 선전선동용으로 만든 것이 북한체제 비판에 쓰이는 역효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 평안북도 신의주 소식통은 이 방송에 “최근 통전부에서 제작된 대남가요 ‘친구’는 남한 가수 김모씨의 노래를 개사한 것”이라면서 “남한 내 반정부 조직 결성과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투쟁에 나서야 통일이 될 수 있다고 선전하는 내용”이라고 말함.
 - 이어 “신의주 컴퓨터봉사소 직원들이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한테 구입한 대남가요를 메모리칩 형태로 주민들에게 전파하다 보위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면서 “그 밖에 평성시, 순천시 등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대남가요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임.

■ 기타 (대남)

- 南北 이산가족 1차 상봉행사(10/30~11/1, 금강산) 종료 및 11/3부터 2차 상봉진행 예정 간략 보도(11/1, 중통·평방)
- 南 軍당국의 「서울 G20 정상회의」(11/11~12) 개최를 앞두고 對北 경제강화 등 준비관련 “국제적 판도에서 反北대결 소동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추악한 소동”이라고 주장(11/1, 중통·노동신문·평방)
- 남북관계 개선의 기초는 “6.15·10.4선언”이라며 남측의 對北정책 전환 持續 주장(11/1, 중통·노동신문)



- 南 집권세력이 “체제통일 야망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며 北 급변사태 대비, ‘흥익계획’을 작성했다”며 이는 “허황된 망상”이라고 비난(11/1, 평방)
- 北, “南 당국의 친미사대정책은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이 지속되는 근원”이라며 “민족자체의 힘으로 남북문제 해결” 강조(11/2, 중통·노동신문·평방)
- 南北 이산가족상봉 2차행사, 금강산에서 진행 소식 보도(11.3, 중통·중방)
- 北, 南 당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운영전문가그룹(OEG) 정식가입 비난(11/4, 중방)
- ‘韓美 연합대잠수함훈련’ 등 일련의 韓美연합 군사훈련 진행은 “북남 대결과 불신만 더욱 격화될 것이며, 그 결과는 긴장격화 등 남측에도 이익이 될 것이 없다”고 중단 주장(11/4, 평방)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프리처드 “北 핵활동 재개 징후 없어”(11/6)

-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초기 대북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6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핵 활동 재개 징후가 없다고 전했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닷새 동안 북한을 방문한 프리처드 소장은 중국 베이징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영변의) 5MW 원자로는 폐쇄돼 있었고 냉각탑도 파괴된 상태였다”며 “현 시점에서 추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어떤 것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방북 기간 북한 외무성 당국자 등을 만나 북핵 6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내주 초 우리나라를 방문, 정부 당국자들과 방북 결과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교도통신은 프리처드 소장이 6자회담에 관계한 미국 전·현직 관리로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평양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 中후정위 “한반도비핵화 실현 노력 지속”(11/4)

- 후정위(胡正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북핵과 남중국해 문제 등 대아시아 외교 방침을 상세히 밝히며 대화와 협력 원칙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패배로 끝난 미국의 중간선거 직후 나온 중국 외교부의 입장 표명은 아시아에 대한 개입을 삼가라는 메시지를 오바마 행정부에 던지는 한편 남중국해 분쟁 등을 계기로 중국에 위협을 느껴온 일부 동남아 국가들을 달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는 지적임.
- 중국 외교부의 아시아 담당 책임자인 후 부장조리는 4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유관 당사국 및 국제사회와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 데 있어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후 부장조리는 이날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당사국 사이의 관심사를 균형 있게 해결해 동북아 평화안보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은 지역 갈등을 근본적으로 줄임으로써 동북아의 장기적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의 이웃 국가로서 우리는 한반도 정세 변화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며 “중국은 줄곧 유관 당사자들이 상호 관계를



개선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애써왔다”고 강조했다.

- 후 부장조리는 “최근 긴장 상태에 있던 한반도 정세가 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6자회담 재개 등을 주제로 접촉했던 각국이 모두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하고 상호 관계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 美 “北 비핵화 협약엔 6자회담 재개 검토”(11/3)

- 미국 백악관은 2일 만일 북한이 비핵화 문제와 도발적 행위 중단 등에 대해 만족할만한 약속을 한국에 한다면, 6자회담에 복귀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내주 아시아 방문 일정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 베이더 보좌관은 “북한 어뢰에 의한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북한은 한국을 공격하지 않고, 도발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점 등 자신들의 의도를 한국에 확실하게 약속함으로써 한국의 우려를 해소해야 했다”면서 “그렇게 되면 6자회담 재개로 이행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더 보좌관은 “6자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추구하는데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있어야만 한다”면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그는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협상과 6자회담 과정에서 한발짝 앞으로 나왔다가 한발짝, 심지어 두발짝 뒤로 물러서곤 했다”며 “우리는 그런 성격의 프로세스가 재개되기를 원치 않으며, 진정성있는 비핵화로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그는 “북한은 현재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라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한 믿음만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그런 제재를 받는 상태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더 보좌관은 서울 G20(주요20개국) 행사를 계기로 오는 1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같은 날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열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일본 요코하마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기간에 이뤄질 오바마 대통령과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국방 “北, 핵융합 기초적 수준 시작된 듯”(11/2)

-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일 북한의 핵융합 실험 가능성에 대해 “핵융합의 경우 기초적 수준은 시작됐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명확히 확인된 정보는 제한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이어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무기화하는 것도 진행되고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핵실험 빈도가 높을 수록 실전배치 가능성은 높아진다. 실전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에 대해 “40kg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탄도 미사일이 유용한 운반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외에 수송기가 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 장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1,2차 핵실험 사이에 2년간의 터울이 있었던 만큼 금년이 그런 해가 될 수도 있어 북한에 대해 살살이 첩보 등을 보고 있다”며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명확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북한의 1,2차 핵실험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무소속 이인제 의원의 질문에 “우리의 정보능력이 노출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비교적 정확한 판단은 했다고 생각한다”며 “언제 어느 순간에 한다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개략적 판단은 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나. 미·북 관계

● “北인권, 北美관계 개선에 중대 영향 미칠 것”(11/6)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5일 “인권은 미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안”이라며 “인권문제가 미국과 북한 간 관계 개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킹 특사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학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에서 ‘북한과의 관계와 인권신장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가진 강연에서 “북한의 인권준중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되는데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북한의 인권실태와 탈북자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미 국무부가 심각한 인권남용과 관련된 보고서들을 내고 있고, 유엔 보고서나 학자들, 인권 기관들도 지속적으로 북한이 인권을 남용하는 최악의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킹 특사는 “미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우선 유엔과 유엔 인권이사회(UNHRC) 등 국제기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남용 사례를 확인하고 관심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또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을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와 북한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해 중국에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의 당사자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



했음. 킹 특사는 이와 함께 “비정부기구(NGO), 방송, 신개념 미디어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정보유통 등도 북한에서 인권을 강화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소개했음.

- 킹 특사는 특히 북핵과 관련해 국제적인 제재가 이뤄지고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제 조사에서 북한의 개입을 드러내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나 접촉이 극도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그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관계를 지속하는 NGO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북한과 관련된 NGO들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재무부, 대북제재 이행 관련규정 발표(11/5)

- 미국 재무부는 4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발효돼 있는 기존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날 연방관보에 지난 2008년 6월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천안함 사건 이후 추가 대북제재를 단행한 행정명령 13551호 이행과 관련된 세부 규정(31 CFR Part 510)을 추가 게재했음.
- 이 규정은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관이나 인물들에 대한 자산 동결, 거래 금지 등을 규정한 이들 두 행정명령을 미 정부나 금융기관 등이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 용어의 의미나 해석,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해 두고 있음. 예를 들어 제재 대상이 되는 개인·기관의 자산이나 자산에 따르는 이자 등은 무효이며 구체대상이 아니라는 선언적 규정이나, 제재 대상이 되는 인물이 미국 내에서 긴급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 이를 허용하되 이후 의료비 지급에 따르는 거래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이 담겼음.
- 재무부는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앞으로 좀 더 포괄적이고 자세한 해석과 용어 정의 등을 담은 규정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만을 특정해 제재의 이유와 범위를 다룬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08년 6월 27일 발표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지난 8월 30일을 기해 효력을 발휘한 13551호 등 두 개가 있음.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13551호는 북한의 사치품 조달행위, 돈세탁을 비롯한 현금 밀수, 마약 거래, 화폐위조 등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를 제재대상에 포함, 북한 김정일 정권의 통치자금을 옥죄는데 초점을 맞춘 게 특징임.
-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효된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TWEA)의 적용대상에서 풀어주면서 ‘안전장치’ 격으로 북한의 여전한 핵확산 위험과 무기급 화석연료의 존재를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북한 재산의 동결상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었음.



다. 중·북 관계

● 최영림 北총리, 中랴오닝서 ‘경협 행보’(11/6)

- 중국 동북지역을 방문 중인 최영림 북한 내각 총리 일행이 6일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으로 이동, ‘경협 행보’를 이어갔다. 선양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 총리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이날 오전 선양에 도착, 산업 시설을 시찰하고 왕민(王珉) 랴오닝성 서기 등 랴오닝 간 부들과 만나 양측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양측은 이 자리에서 최근 단둥(丹東)을 거점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북중 간 IT산업의 협력을 증진하는 등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신압록강대교를 조속히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총리 일행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지린(吉林)시를 방문, 김일성 주석의 모교인 위문(毓文)중학교를 참관하고 교정에 있는 김 주석의 동상에 헌화한 뒤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교사 내부를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지난 1일 방중, 헤이룽장(黑龍江)과 지린성에 이어 랴오닝성을 방문함으로써 최 총리는 이번 방중 기간 동북 3성을 모두 방문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지난 8월 방중 당시 동북지역을 순회했지만 랴오닝성은 방문하지 않았다.

● 최영림 北총리, 지린 산업시설 집중 시찰(11/5)

- 중국 동북지방을 방문 중인 북한의 최영림 내각 총리 일행이 지린(吉林)성의 산업 시설을 집중적으로 시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춘의 소식통들은 5일 “최 총리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오늘도 창춘(長春) 경제개발구 등 지린성 내 산업 시설을 시찰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지린성에 도착한 최 총리 일행은 창춘 이치(一汽) 자동차와 창춘열차회사, 창춘농업박람회, 지린대학 등을 둘러본 데 이어 쑨정차이(孫政才) 지린성 서기가 주재한 지린성 경제 상황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길림신문이 5일 보도했다.
- 신문은 설명회에서 쑨 서기와 왕루린(王儒林) 지린성 성장이 최 총리 일행과 만나 중국의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 개방 선도구’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북중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 쑨 서기는 이 자리에서 “양국 변경선 가운데 80%가 지린성 내에 있을 만큼 양측은 지리적으로 밀접하고 북한에 진출한 지린성 기업이 35개에 이르며 지난해 양측 무역액이 6억1천만 위안으로, 북한은 지린성의 4대 무역 동반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쑨 서기는 이어 “경제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며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넓혀 더욱 큰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총리도 “양국 고위층의 상호 방문으로 우호관계가 더욱 높은 단계로 양호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지린성이 거둔 성공적인 경험과 선진기술을 익히고



쌍방간 교류와 협작이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최 총리 일행은 6일 랴오닝(遼寧)성으로 이동, 선양(瀋陽)과 다롄(大連), 단둥(丹東) 등을 시찰하고 랴오닝성과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北최영림이 중국 동북지역에 간 이유>(11/5)

- 최근 중국 동북지역을 방문한 최영림 북한 내각총리의 ‘예상치 못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지난 1일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시를 돌연 방문한 최 총리는 3일 지린(吉林)성 창춘시로 이동, 중국 국무원의 장더장(張德江) 부총리와 회담했는데, 5일이나 6일 중 랴오닝(遼寧)성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동북3성’ 성도를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이 될 것으로 보임. 북한 권력서열 3위인 최영림이 이번에 대동한 인사들의 면면도 흥미로움. 2003년부터 내각 부총리로 일해 온 로두철은 9명의 부총리 중 ‘대외경제 담당’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작년 4월부터는 북한의 경제발전 계획 수립을 총괄하는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음.
- 김창룡 국토환경보호상은 남한의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를 관장하는 것과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고, 황학원 도시경영상은 도시개발 업무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중국 측과 도로, 항만, 건설, 도시개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됨.
- 최 총리가 들고 있는 동북3성 지역에 지난 8월 하순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녀갔음. 지난달에는 사상 처음 중국 베이징을 단체방문한 북한의 12개 시·도당 책임비서들이 귀국길에 동북3성의 산업 시설을 둘러봤음.
- 이런 움직임을 놓고 동북3성을 매개체로 북중 양국의 경제협력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이 나옴. 그 근거는 북중 양국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정학적 위치에 동북3성이 놓여 있기 때문임.
- 북한 입장에서는 9.28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의 후계를 사실상 공식화한만큼 단기간에 경제적 성과를 내야할 처지임.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기댈 만한 나라는 중국 뿐이고, 중국의 여러 지역 가운데서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북3성이 최적의 경제협력 파트너로 꼽힌다는 분석임.

● <중동북, 최영림 北 총리 방중에 큰 기대>(11/4)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진 최영림 북한 내각 총리의 중국 방문에 대해 동북 3성이 큰 기대를 걸고 있음. 최 총리가 북한 내 서열 3위의 최고위급 인물인 데다 그의 이번 방중을 최근 활기를 띠는 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보로 보기 때문임.



-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경협에 대한 북중 간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면 최 총리의 이번 방중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동북지역과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북중 경협이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음. 특히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가 최 총리의 이번 방중에 거는 기대가 커 보임.
- 연변주 공무원들은 4일 “최 총리의 이번 방중 기간 라진 항로 조기 개통 등 북중간 경협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음.
- 연변의 한 공무원은 “동북진흥 전략인 창지투(長吉圖) 개방 선도구 사업이 지난해 국무원 승인을 받아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성공의 열쇠는 결국 동해 항로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바닷길이 열려야 창지투 선도구가 실질적인 동북아시아 물류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음. 그러면서 “창지투 성공의 관건은 동북의 풍부한 자원을 남방과 동남아로 수출할 수 있는 동해 항로 확보”라며 “최 총리가 이번에 라진항 조기 개항의 물꼬를 터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음.
- 지난해 11월 창지투 개방 선도구 사업의 국무원 승인 이후 이 일대 교통망은 놀라운 속도로 정비되고 있음. 지난 9월 창춘-지린-옌지-투먼-훈춘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됐고 지난달에는 이 구간 고속철도도 착공, 2013년 완공 예정임.
- 중국은 또 투먼(圖們)-북한 남양-두만강-러시아 하싼으로 연결되는 철도와 투먼-청진, 투먼-라진 구간 철도 보수 계획을 창지투 개발 계획에 포함했음. 북한과 공동으로 접경지역인 투먼에 변경자유 무역지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북중 경협의 밑그림을 완성해놓고 있음. 그러나 통행료 징수를 둘러싼 북중간 갈등으로 원정리-라진항 구간 고속도로가 뚫리지 않은 탓에 대량 물류 수송이 어려워 라진항 개통이 늦춰지면서 애를 태우고 있음. 연변에서 무역을 하는 한 교민은 “한국이나 남방으로 운송하려면 다롄(大連)항을 이용해야 하는데 물류비 부담이 너무 커 산동지역과 경쟁이 안된다”며 “연변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해상 항로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그는 “아무리 중국 내 교통망을 정비하더라도 동해 항로가 열리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며 “라진, 청진항 가동이 본격화돼야 창지투가 중국이 원하는 동북아 물류 거점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창지투의 관문으로 부상한 훈춘(훈춘)은 73만㎡의 국제 경제 합작구 건설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면적은 5만㎡에 불과함.
- 이 지역의 풍부한 석탄도 물류비 부담 때문에 해외 수출이나 남방 운송 길이 열리지 않고 있음. 훈춘의 한 공무원은 “합작구에 30여 개 외국 기업이 들어와 있고 창지투 개발 계획이 알려지면서 훈춘이



주목받고 있지만 외국 기업들이 실질적인 투자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라진항만 개통되면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홍콩 등에서도 투자가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음. 그는 “최 총리의 이번 방문 기간 북중 경협이 걸림돌이 됐던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겠느냐”며 “라진항 개항도 합의가 이뤘으면 좋겠다”고 밝혔음. 최근 IT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이 활발해진 랴오닝성 단둥(丹東)도 최 총리 방문 기간 신압록강대교가 착공돼 신의주와의 물류 확대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北 최영림, 지린성과 농업교류 집중 논의(11/4)

- 4일 지린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최 총리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지린성 창춘(長春)에서 장더장(張德江)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쑨정차이(孫政才) 서기 등 지린성 간부들과 만나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음. 이 자리에선 특히 선진 농업 전수 등 북한에 대한 중국의 농업 지원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졌음.
- 지린성은 옥수수과 콩 등 중국의 대표적인 발작물 산지임. 올해 녹두값 폭등을 불러온 도매상들의 가격 담합과 사재기도 지린 상인들이 주도했을 만큼 중국 내 농산물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큼. 산간지대가 많아 옥수수를 비롯한 발작물 의존도가 높은 북한이 식량난 해결을 위해 지린의 농업 기술과 선진 농업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됨.

● 北 최영림 총리, 창춘 방문(11/3)

- 최영림 내각 총리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은 3일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에 이어 지린(吉林)성 성도 창춘(長春)을 방문, 쑨정차이(孫政才) 지린성 서기와 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춘의 외교소식통들은 최영림 총리가 이날 오전 창춘의 난후(南湖) 호텔에 도착한 후 쑨정차이 서기와 회담을 했다고 말했음.
- 소식통들은 최영림 총리와 쑨정차이 서기간의 회담에서 북한과 지린성간의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했음. 최 총리는 지난 1일 하얼빈에서 지빙쉬안(吉炳軒) 헤이룽장(黑龍江)성 공산당 위원회 서기와 회담하고 2일까지 이틀간 하얼빈의 전기 기업과 제약기업, 농업연구소 등을 시찰했다고 흑룡강신문이 3일 보도했음.
- 최 총리는 이번 방중에서 지난 8월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시찰 노선을 역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 미뤄 김정일 위원장이 당시 창춘에서 있었던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룬 합의내용을 실무적으로 이행하는 수순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음. 지난 10월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단체 방문했던 북한의 시·도당 책임비서 12명은 창춘과 하얼빈의 식품가공 및 궤도교통, 화학공업, 기계제조 기업과 농업기지를 돌아보고 헤이룽장 지빙쉬안



서기와 지린성 쑨정차이 서기를 각각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음.

- 중국은 작년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을 통해 창춘에서 지린, 두만강 유역을 2020년까지 경제벨트로 이어 낙후지역인 동북 3성의 중흥을 꾀하자는 이른바 ‘창·지·투(長吉圖) 개발 계획’과 더불어 이 계획의 핵심인 ‘동해 출항권’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설명했고 김 위원장 역시 이를 수궁해 이를 토대로 한 경협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 北 최영림 총리 방중..경협 행보 가속화(11/3)

- 최영림 내각 총리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중국 동북지방을 방문하는 등 최근 북중 경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북한 대표단의 방중이 러시를 이루고 있음. 특히 최 총리는 지난 9월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된 당내 서열 3위의 고위 인사로, 새 지도부 발족 이후 최고위급의 방중이라는 점에서 주목됨.
- 최 총리가 지난 1일 하얼빈에서 지빙쉬안(吉炳軒) 헤이룽장(黑龍江)성 공산당 위원회 서기와 회담하고 2일까지 이틀간 하얼빈의 전기 기업과 제약기업, 농업연구소 등을 시찰했다고 흑룡강신문이 3일 보도했음. 특히 전기 기업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8월 말 방중했을 때에도 들린 곳이라는 점에서 최 총리의 이번 방중 목적이 헤이룽장성과의 경제 협력 강화에 있는 것으로 풀이됨. 신문은 그러나 최 총리의 3일 이후 일정이나 동행한 북한 대표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신광렬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 대표단이 헤이룽장성 하얼빈(哈爾濱)시를 방문, 린뮈(林鐸) 하얼빈시장 대리와 만나 ‘우호 교류 도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 북한이 헤이룽장과의 경협에 의욕을 보이고 있음.
- 북한 국가과학원 대표단도 지난 1일 단둥(丹東)에서 개최된 ‘제1회 북중 과학기술 교류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단둥을 거점으로 한 북중간 IT산업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음. 북한 대표단은 이날 교류협의회 참석에 앞서 쉬춘광(徐春光) 단둥시 부시장을 면담,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과학기술 합작을 진행할 것을 제의했으며 쉬 부시장 역시 북한과 과학기술 합작에 나설 뜻이 있다고 화답했음. 지난달 18일에도 북한의 선봉기술총회사 김동식 사장이 인솔하는 북한의 과학기술사업 대표단이 단둥을 방문해 IT산업 합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음. 선봉기술총회사는 이번 방문 기간 단둥의 한 IT업체와 소프트웨어 단지 개발과 IT산업 인력 양성, 기술 교류 및 경제 합작 방안 등을 협의했음.
- 김기룡 책임주필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신문 대표단도 지난 2일 중국 방문을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김 책임주필은 지난해까지 조선중앙통신 사장을 역임했음.



● 北, 대외무역 中 의존도 갈수록 심화(11/2)

-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국 연변(延邊)대학에서 열린 ‘2010 두만강 학술 포럼’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권철남 연변대 교수는 “1998년 바닥을 친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 증가율은 연평균 13.5%”라며 “대중 무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북한의 1998년 무역액은 16억6천만 달러로 바닥을 기록한 이후 연평균 13.5%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지난해 대외무역액이 56억4천만 달러에 달했음. 특히 중국과의 교역이 눈에 띄게 증가했음. 1999년 3억7천 달러에 불과했던 북한의 대중 무역액은 10년 만인 2008년 27억9천만 달러로 8배 가까이 늘어났음. 연평균 증가율이 25.2%에 이룸.
- 이 기간 북한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4%에서 49.5%로 배 이상 증가했음.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1999년 4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10년 만에 7억6천만 달러로 연평균 38.7% 증가했으며 이 기간 대중국 수입액은 3억3천만 달러에서 20억3천만 달러로 22.4%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했음. 2004년 2억1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북한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액은 2008년 12억7천만 달러로 크게 벌어졌음.
- 한국과의 무역액은 1999년 3억3천만 달러에서 2005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2007년 18억 달러까지 늘어나며 급증세를 보였음. 그러나 2008년에는 18억2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2천만 달러가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지난해는 16억8천만 달러로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음. 일본의 경우 2001년 4억8천만 달러를 정점으로 대북 무역액이 해마다 감소했음. 특히 북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는 북한의 대일 수입은 전무한 가운데 수출액만 1천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음.
- 북일 간 무역은 지난해 완전히 중단된 상태임. 권 교수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이 감소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음.

● <北, 中학술포럼서 ‘라선특구’ 적극홍보>(11/2)

- 중국 연변(延邊)대학에서 열린 ‘2010 두만강 학술 포럼’에서 북한이 라선경제무역지대 홍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음. 포럼 이틀째인 2일 분임 토의에서 조선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김신호 실장은 북한이 외자 유치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라선지대법)’ 내용을 상세하게 명했음. 김 실장은 개정 라선지대법은 라선을 ‘특수경제무역지대’라고 명시, 경제특구로 차별화했음을 분명히 했다고 소개했음.
- 김 실장은 “이전의 라선지대법이 라선지대를 단순히 무역과 투자, 중계수송 등의 ‘특혜지역’으로 규정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조치”라고 강조한 뒤 “외국 투자자들이 훨씬 많은 특혜와 편의를 보장



-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그는 또 라선특별시에 자율권을 대폭 이양, 라선시 당국이 주도적으로 외자 유치에 나설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다고 전했다. 중앙기관이 쥐고 있던 라선지대 외자기업에 대한 심의와 승인, 창업 허가 등 모든 권한을 라선경제무역지도기관과 라선시 인민위원회에 위임했다는 것임. 이에 따라 외자기업에 대한 심의와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는 것임.
 - 김 실장은 또 새로운 라선지대법에 따라 라선에 투자하는 외자 기업에는 파격적인 세금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고 소개했다. 북한 내 일반 외자기업에 대한 소득세율은 결산 이윤의 25%이지만 라선지대 투자 외자 기업에는 14%만 적용되고, 첨단기술이나 자원개발, 기반시설 건설 등 국가 장려 산업의 소득세율은 10%에 불과함. 특히 3천만 유로 이상의 기간산업 투자 외자기업은 이익이 나는 해부터 4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50%의 세제 감면혜택이 적용된다는 것임.
 - 김 실장은 “파격적인 세금 우대 정책에 따라 외국 투자자들이 라선지대 투자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외국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법률 수정과 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주제 발표에 나섰던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김상학 실장은 라선 홍보에 훨씬 적극적이었음. 김 실장은 라선지대를 중심으로 한 두만강 삼각주가 동북아시아의 경제 발전과 공존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촉구했음.
 - 그는 “라선지대 개발은 막대한 자금과 기술,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주변국들이 적극적인 협력과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역시 라선지대 외자 유치를 위한 법률 수정 등 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 북한 학자들이 라선에 대해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 9월 초 창춘(長春)에서 열렸던 동북아무역박람회에서 북한이 보여줬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임. 당시 북한 무역성은 북한 투자 환경 설명회를 열고도 불과 5분여 만에 끝내 투자 유치에 대한 의지가 없는 ‘요식 행위’라는 지적을 받았음. 포럼에 참가한 중국의 한 대북 전문가가는 “이번 포럼에 나선 북한 학자들의 자세는 과거와 확실히 다르다”며 “라선지대에 대한 대외 개방 의지가 확고하다는 메시지를 주변국에 보내는 것 같다”고 분석했음.

라. 일·북 관계

● 日, 조선학교 수업료지원 사실상 결정(11/5)

- 일본 정부가 반년 넘게 논의해온 조총련계 조선학교에 대한 수업료 지원을 사실상 확정했음. 다카키 요시아키(高木義明) 문부과학상은



음. 일본 고교 교과서 중 상당수에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일본 땅이라고 적시하고 있고,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일본 고교 지리.역사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중학교 해설서에 기초해 심화학습을 하라고 교사들에게 요구했음.

마. 기 타

● “北최태복, 인권문제 논의차 내년 초 영국 방문”(11/2)

- 북한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국회의장 격)이 내년 초 영국을 방문, 의회와 사법체계를 살펴보고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전했다.
- 지난달 22~27일 북한을 방문한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은 RFA와 인터뷰에서 “방북 기간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입국 거부 등의 문제를 북한 측에 제기했다”면서 “최태복 의장이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 영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유민주당 출신인 앨튼 의원은 2003년과 2009년에도 방북한 경험이 있고, 지난달에는 북한과 영국의 수교 10주년을 앞두고 북한에 가 최태복 의장 등 고위 인사들을 만났음. 북한은 2001년과 2002년 유럽연합(EU)과 ‘인권대화’를 가진 바 있고, 작년 10월에는 김춘국 외무성 국장이 스웨덴을 방문해 자국의 인권문제를 논의했음.
- 앨튼 의원은 또 “이번 방북 기간 북한 당국의 태도가 변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며 “궁석웅 외무성 부상이나 리종혁 북·영친선의원단과 대화할 때 ‘선군’보다 ‘변화’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고 ‘변영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고 전했다.
- 그는 이어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의 교수진이 평양 과학기술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영국이 지원하는 영어교사 양성 사업의 성과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매우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고 RFA에 덧붙였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실무차원 FTA 협의 마무리 수순(11/6)

- 외교통상부 최석영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6일 한미 FTA 쟁점 해결을 위한 3일째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 실무차원의 논의를 마무리 짓는 수순에 돌입, 이틀간의 협상을 토대로 합의된 내용과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리에 착수했음.



- 양측 실무 대표들은 미해결 쟁점에 대해선 오는 8~9일 예정된 통상 장관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도록 할 방침임. 양국 정상들이 이미 오는 1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FTA 쟁점을 해결하기로 몇 차례 공언한 만큼 통상장관회의에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해결 쟁점을 놓고선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 지난 이틀간의 협상을 통해 양측은 미국산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기준 완화,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문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환급 등 자동차와 관련된 상당 부분에서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기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허용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특히 양측은 합의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담아낼지를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후문임.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합의 내용을 어떤 형식에 담느냐는 ‘형식’의 문제는 합의 내용과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아직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밝혀 양측 간 입장차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음. 한국 측은 기존에 서명된 FTA 협정문을 고칠 수 없으며 부속서를 수정하거나 양측 통상장관 간 양해서한을 통해 합의 내용을 담을 것을 주장하는 반면에 미국 측은 합의 내용이 법적, 제도적 구속성을 가져야 한다며 강력한 이행을 보장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완성차 판매 시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문제 등 자동차 관련 주요 이슈들의 경우 한·EU(유럽연합) FTA가 상당한 참고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 현재 월령 30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선 미국 측이 자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강조하며 수입개방 전면 확대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난색을 표명,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는 전언임. 양측은 필요하면 7일에도 실무차원의 협의를 계속할 방침임.

● 美 “조지워싱턴호 참여 서해훈련 꼭 실시”(11/5)

- 미국 국방부는 4일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여하는 한미 연합 훈련을 서해에서 반드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제프 모렐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말 서해에서 실시하기로 한 연합항모강습단 훈련이 미뤄진 것과 관련, “훈련을 취소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그는 “서해에서 조지워싱턴호와 함께 하는 연합작전을 할 적절한 날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항모(조지워싱턴호)와 함께 서해에서 훈련할 것이라는 점은 믿어진다”고 강조했다.
- 그는 “훈련이 취소됐다는 것은 단지 과장에 불과하다”면서 “조지워싱턴호와 함께 우리는 서해에 갈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다만 구



체적으로 언제 훈련이 이뤄질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훈련 시기가 결정되면 이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한미 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응한 연합훈련의 하나로 당초 지난달 말께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하는 서해훈련 실시를 검토했다가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달 말 훈련실시를 일단 유보했음.

● 김의교 “한미FTA, 자동차부문 협의여지 있어”(11/5)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우리 정부도 연비규제 면에서 규정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문에서) 서로 협의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음. 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수석대표급에서 협의중이며 논의가 되면 통상장관간에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음.
- 김 장관은 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전 FTA 협상 마무리 가능성에 대해 “미국도 G20까지 서로 협의할 사안이 있으면 마무리 하자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급적 그때까지 마무리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음. 그는 이어 “지난번 체결된 FTA 협정 문안이 한·미 양국의 이익을 상당히 균형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문안을 수정하는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제기하는 밀실협상 의혹에 대해 “협상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은 타결이 될 수도 있고 제한이 됐다가 차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일이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음.
- 김 장관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조선왕실의궤와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가 반환될 가능성에 대해 “일본 측도 조선왕실의궤에 대해 빠른 시간내에 반환할 수 있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열심히 협의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문화재법상 해외반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백악관, ‘자동차’ 진전시 FTA타결 시사(11/5)

- 미국 백악관은 4일 자동차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에 이를 수도 있음을 시사했음.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FTA 합의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 중에 발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는 협상에 달려 있다”고 밝혔음.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 나라(미국) 자동차 업계와 자동차 산업 근로자들에 반하는 것이라고 느끼는 (FTA) 협정에 변화가 만들어지는 진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때와 최근 (FTA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말했다”면서 “대통령이 (FTA 협정을) 지지하기 위해서



는 무엇이 협정에서 진전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의 윤곽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자동차가 됐건 다른 문제들이 됐건 간에 우리는 어떤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예를 들어 자동차 분야에서 대통령이 느끼기에 우리 업계와 근로자들에게 좀 더 나은 협상이 됐다고 느낀다면 이(협정)는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인도, 한국을 포함한 이번 아시아 순방이 시장 개척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음.

● 한미, 실무레벨 FTA 막바지 협의 착수(11/4)

-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4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FTA 쟁점현안 타결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착수했음.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된 실무협의에서 미국측은 현재 서명된 한미 FTA에서 수정·보완돼야 할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을 한국측에 공식 전달했음. 미국측 요구사항은 지금까지 미국측이 밝혀온 대로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그외의 문제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비공식 협의과정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문제들도 일부 포함돼 있어 이날 실무협의에서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음.
- 양측은 일단 그동안 비공식 협의과정에 진행된 내용과 미국이 이날 전달한 공식 요구사항을 토대로 양측이 절충가능한 부분과 미해결 쟁점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는 후문임. 한미 양측은 일단 당초 예정대로 5일까지 협의를 진행한 뒤 협상일정을 연장할지 결정할 계획이나 현재로선 실무협의를 연장해 ‘끝내기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음. 또 이번 주말께부터는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USTR 부대표도 한국을 방문, 실무협의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번 실무협의는 양국 정상 이 오는 1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FTA 쟁점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가운데 열려 어떤 식으로든 타결에 가까운 진전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 양측은 이번 실무협의에서 FTA 쟁점을 집중 조율한 뒤 미합의 쟁점에 대해선 내주 초 예정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간 통상장관회의에서 최종 타결하고 그 결과를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쇠고기 문제와 관련, 미국측은 현재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현단계에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자동차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유지 또는 관세철폐기한 연장 및 ‘스냅 백(snap back.관세환급조치)’ 적용, 미국산 자동차 안전 및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 등이 핵심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음.

● <美중간선거> 한반도전문가 인터뷰(11/3)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일 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난 중간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한(對韓), 대북정책 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음.
- 이들 전문가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의 승리로 의회 내에 대북 강경기류가 강해질 수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직접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또 한미동맹이 역대 최고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별다른 변화도 예상하기 힘들다고 관측했음.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전망과 관련,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관건은 다음주 서울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까지 한미 양국이 미해결 쟁점에 대해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에 달려있다고 분석했음.
-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정책연구실장 = 중간선거 결과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도록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 공화당 의원들은 아마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승인할 것임. 미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 의회의 특별한 예산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행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킬 특별한 수단도 없음.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함.
-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한미동맹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음. 공화당이 한미동맹에 어떤 문제점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한 가지 조그만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현재의 예산 환경 하에서 의회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모든 예산을 제공할 것인가임. 이는 지켜봐야 할 것임.
- ▲존 페퍼 외교정책포커스(FPIP) 소장 = 중간선거 결과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도록 하지는 않을 것임. 의회는 전통적으로 핵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았음. 협상이 타결되고 미 행정부가 적절한 돈을 보상 패키지로 북한에 줘야 한다면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 새 의회에서 하원 외교위원장을 일리어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맡는다면 그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좀 더 강경한 대응을 하도록 오바마 정부를 압박할 것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거의 똑같이 유지될 것임.
- 한미 FTA 비준문제는 모든게 오바마 행정부가 밀고나갈 이 협정의 변화에 달려있음. 이는 얼마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FTA를 지지



하느냐를 결정할 것임. 한미 간에는 한국에 대한 더 많은 무기 판매나 미사일방어 논의 등 안보문제와 관련한 더욱 긴밀한 조율이 있을 수 있음. 이 때문에 한미동맹은 현재의 동맹기류가 더욱 촉진될 것 같음.

- ▲데니 로이 하와이대 동서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 공화당이 현재의 미국 대북정책을 특별히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음. 그 이유는 우선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이미 강경하기 때문임. 또 북한 문제는 지금 (미국 내에서) 전면의 이슈가 아님.
-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완화하려할 때 좀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임. 일각에서는 천안함 문제에 대한 북한의 해명 등의 조치가 없어도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오바마 정부가 이런 변화를 검토한다면 공화당 다수의 의회가 이를 쉽게 하도록 두지 않을 것임.
- 한미 FTA는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에 몰려오더라도 여전히 어려운 싸움에 직면할 것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미 FTA를 경제위기에 대한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 자동차업계에 불리한 것이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음.

● <오바마, 李대통령에 “브라더”..30분 통화>(11/2)

- “브라더(Brothe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을 이렇게 부르며 친근감을 나타냈음. 이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오전 9시50분께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30분간 얘기를 나누며,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간 우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음. 미국에서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이날 시작돼 전화통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국 측은 G20 회의의 중요성을 고려해 바로 연결했다고 함.
- 통화에서는 서울 회의의 준비상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현안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선거 상황을 포함한 개인적인 얘기도 오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우선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의 결과와 이 대통령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직원들이 아주 잘해서 국제통화기금(IMF) 금융규제와 개발 의제가 잘 준비되는 것 같다”면서 “놀랄만한 성과(remarkable job)”라고 치켜세웠음. 오바마는 또 최근 유럽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G20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소개했음.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도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 등 미국 측의 협력에 감사하다”면서 “남은 과제를 추진하는 데도 오바마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함께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음.



-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 “이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베트남에서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는 것과 이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들었다”면서 “가능한 사절단을 (한국에) 보내고 FTA는 가급적 G20 전에 합의했으면 한다”고 밝혔음.
-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는 보통의 경제 동맹이 아니다. 한미 동맹이 더 튼튼해지는 것”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관계 뿐만 아니라 세계에 탈보호무역주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화답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의 선거 상황을 설명하며 “최근 들어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전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선거가 아닌 전화를 할 핑계가 생기고 반가운 이 대통령과 통화해 기쁘다”고 친근감을 나타냈음.

나. 한·중 관계

● <中, G20앞두고 韓,佛에 ‘통 큰’ 경제협력>(11/5)

- 중국이 G20(주요20개국)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과 프랑스에 ‘통 큰’ 경제협력 행보를 보이고 있음. 한국에는 오랜 숙원인 삼성과 LG의 차세대 액정표시장치(LCD) 공장 허가 의지를 구체화했고 프랑스에는 200억달러 상당의 경협 계약을 체결한 것임.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런 행보가 G20 정상회의의 현, 후임 의장국인 한국과 프랑스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중국 현지 매체들은 5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프랑스 방문 첫날인 4일(현지시간) 미화 200억달러 이상의 경제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음. 에어버스가 중국에 140억달러 어치의 항공기 102대를 판매키로 했으며 프랑스 원자력 발전업체인 아레바는 35억달러 가량의 우라늄을 중국 광동핵발전그룹(CGNPC)에 공급하고 우라늄 처리공장도 현지에 투자하기로 했음. 프랑스 에너지기업인 토탈도 중국 석유화학공장에 20억~3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음. 아울러 후 주석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5년후에는 양국의 교역액을 현재의 2배인 800억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했음.
- 중국과 프랑스의 이런 경제협력은 지난 2008년 베이징(北京) 올림픽 당시 성화봉송과 사르코지 대통령의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 면담, 중국의 프랑스 유통업체 까르푸 불매운동 등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밀착하는 모양새로 비침.
-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번 후 주석의 프랑스 방문에 국제적인 핵심이슈인 반체제 운동가 류샤오보 문제에 대해 입을 닫는 ‘성의’를 보였음.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류샤오보를 여전히 감옥에 가둔 중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를 외면한 것임. 후주석의 프랑스 방문기간에 국경없는기자회(RSF)는 류샤오보 등의 석방을 촉구하면서 위구르족과 파룬궁 수련자 등은 후 주석을 겨냥해 ‘독재자 환영’이란 플래카드를 내걸어 비난했음.



- 중국은 아직 한국의 LG와 삼성의 LCD 공장 승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 3일 정부의 최고위 의결절차인 국무원 회의를 열어 '승인'했으며 하부단계의 실무 승인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오는 11일 G20 서울 정상회의에 후 주석이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공장 승인을 정식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LG디스플레이가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 지을 8세대 LCD공장은 40억달러 규모이고 삼성전자가 장쑤(江蘇)성 쑤저우에 짓는 7.5세대 공장은 30억달러에 달함.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G20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환율 절상 압박을 우려하는 중국이 현 의장국인 한국과 차기인 프랑스에 쏟는 정성이 대단하다”며 “한국과 프랑스에 대한 통큰 경제협력 행보는 그런 사정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 한·일 관계

● 日 간 총리 “日韓 안보협력 고려할 단계됐다”(11/7)

-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7일 한국과 일본은 정치·경제·문화 뿐만 아니라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도 생각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년 제안했던 일왕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반여건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계 체제를 서두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간 총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날 연합뉴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북한 문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작년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일본 총리의 한국 언론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임.
- 간 총리는 향후 한국과의 협력관계와 관련 “한국은 일본과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인접국으로 미래 지향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일본과 한국은 정치·경제·문화 분야 뿐만 아니라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도 생각해야 한다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이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총리가 직접 한일 안보 협력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임. 간 총리는 “지역적, 국제적인 과제를 포함해 양국 간 장래에 무엇을 협력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2009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연합뉴스·교도통신과의 공동인터뷰에서 일왕의 방한을 초청한 것과 관련 “천황의 방한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내부 정세와 상관없이 북한 스스로 국제적 고



립에서 벗어나야만 장래를 열어갈 수 있다”면서 “(일본은 한국, 미국 등) 관계국과 긴밀하게 연계해가면서 북한에 비핵화,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간 총리는 지난 8월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에서 약속한 조선왕실 의궤 등 한국에서 유래한 도서의 반환과 관련 “현재 성의있게 준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빠른 시기에 인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간 통상현안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은 선진공업국이자 세계 경제를 견인해가는 처지로, 양국이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해 자유로운 물류의 흐름을 만들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일한 양국에 부과된 21세기 사명”이라면서 “조기에 EPA를 체결함으로써 한층 강고한 일한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곧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관련 “세계 경제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려면 G20에서의 국제협력이 열쇠가 되는 만큼 서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의장국인 한국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 미·중 관계

● 中, ‘美양적완화’ 비판에 앞장..여론 선도(11/6)

- 중국은 5일 경기부양을 위해 시중에 총 6천억달러(약 66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내용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양적완화 조치에 대해 해명을 촉구한 데 이어 다른 국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판에 앞장섰음.
-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은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2차 양적완화 조치가 미국경제 상황을 볼 때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다른 국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저우 행장은 이날 중국 경제지 차이신(財新)이 주최한 포럼에서 “만약 미국의 대내정책이 자국에만 최선의 정책이고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면 각국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잉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연설했음.
- 그는 남미와 아시아의 신흥국들이 미국의 양적완화가 미칠지도 모를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양적완화 때문에 핫머니가 물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음.
- 이와 관련, 샤빈(夏斌)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달러와 같은 주요 기축통화의 발행에 제한이 없다면 다른 금융위기의 발생이 필연적”이라고 말하고 “개도국들은 핫머니 유입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저우 행장은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에 대해선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지만 부작용이 없는 중국 전통의 ‘중의학 치료법’을 쓸 것이라 말해



급격한 환율 조정을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음.

- 중국의 잇단 양적완화 비판은 미 연준의 '양적완화' 발표 후 신흥국을 중심으로 통화전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와 주목되고 있음. 그동안 위안화 평가절상요구, 대미 흑자폭감소 등 미국의 공세에 시달려온 중국이 양적완화 조치를 계기로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음. 저우 행장은 그러나 "느린 경기회복과 높은 실업률, 낮은 인플레이션, 제로에 가까운 저금리 기조에서라면 양적 완화 조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해 양적완화와 위안화 가치 절상요구 등을 놓고 미국과 협상을 통한 협력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 두었음.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이날 미국 코닝의 윈델 위크스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미간 경제협력 강화하고 경제문제를 정치화하지 말 것을 촉구했음.

● 中, 美에 양적완화 해명 촉구(11/5)

- 위안화 가치 평가절상,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 등으로 미국에 수세이던 중국이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을 계기로 공세로 돌아섰음. 중국은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6일 앞둔 5일 6천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의 위협성을 경고하면서 Fed에 이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공세를 취했음.
- 추이텐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적완화 정책은 많은 나라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우려 속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이 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음. 중국측 서울 G20회의 셰르파인 추이 부부장은 "그들(미국)은 우리에게 설명을 빚졌다"면서 양적완화에 대해 중국 고위관리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우리는 (미국이) 책임있는 태도를 취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음.
- 추이 부부장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1일 서울에서 개막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 임하는 중국의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이 양적완화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세계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에 손상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음.
- 추이 부부장의 이날 발언은 미 연준의 '양적완화' 발표 후 신흥국을 중심으로 통화전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되고 있음.
- 추이 부부장은 그러나 G20 서울 회의가 미국의 양적완화를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이날 그의 발언은 이 문제를 서울 G20 회의에서 거론할 것임을 시사했음. 그는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에 대해선 중국이 장기간에 걸쳐 위안화를 평가절상해왔다고 강조하고 일정기간 내에 인위적인 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음. 추이 부부장은 또 경상수지 적·흑자 폭을 국내



총생산(GDP)의 4% 이내로 축소, 지구상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미국측 제안을 “요점을 놓친 것”이라며 일축했음. 그는 “이러한 숫자의 인위적인 목표 설정은 계획경제 시대를 상기시킨다”고 지적하고 “경상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한가지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고 역설했음.

- 중국은 미국에 양적완화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동시에 위안화 평가 절상과 경상수지 관리 목표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함으로써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공세에만 물리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됐음.
- 추이 부부장은 G20은 G7이나 G8보다 더욱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강조하고 서울 정상회의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각종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세계경제의 거버넌스임을 분명히 입증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음. 그는 한국은 이번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완벽한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치하하고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모든 참가국의 지지 아래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음. 추이 부부장은 북핵 6자 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사건임을 전제, 현재 난관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한-중을 비롯한 당사국간의 긴밀한 접촉과 협력 등을 통해 극복되고 조만간 재개될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답변했음. 그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연내에 실현될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음.

● 中 “안정된 중미관계, 양국이익 부합”(11/4)

-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참패로 끝난 가운데 중국 정부가 미국 내 정치 동향에 관계없이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기를 희망한다는 공식 반응을 내놓았음.
-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중미관계의 발전은 양국과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음. 홍 대변인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을 해 달라는 요청에 일단 “미국 중간선거는 미국의 내정”이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음. 홍 대변인은 “안정된 중미관계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며 이것이 미국 양당의 공통 인식이라고 믿는다”며 “중국은 미국이 우리와의 전면적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홍 대변인은 6일 인도를 시작으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계획과 관련해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미국은 아시아 국가의 평화와 발전의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무가 있으며 우리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 지역 안정을 지켜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한편 홍 대변인은 내주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서울 G20 회의는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은 아시아 국가의 발전상이 충분히 소개되는 한편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국제금융기구 개혁, 보호무역 반대 등에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美중간선거> 美, ‘中 때리기’ 바뀔까(11/4)

- 집권 민주당의 참패로 끝난 미국 중간선거로 미국의 ‘중국 때리기’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4일 ‘미국, 진퇴양난에 처해 중국 때리기 끝날 수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대(對) 중국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음.
- 중국의 경제정책과 군비 증강을 비판하는 이른바 ‘차이나 이슈’는 미국의 중간선거 기간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한 단골 메뉴였음.
- 스티븐 올린스 미중관계 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을 미국의 경제적 적으로 비판하는 30초짜리 광고가 사라지게 됐다”면서 “내년 1월 20일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상원과 하원은 중미 관계의 진정한 이슈들, 즉 북한, 이란, 테러리즘, 기후변화 등에 대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했음.
- 그러나 중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초당파적 자세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에 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음.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 연구소 동북아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미국의 국내외 정책이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진퇴유곡의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음.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무역 문제에 있어 친(親)중국적인 정책을 선호해 왔음.

● “美선거결과,미-중관계에 큰 변화없다”(11/4)

- 중국의 미국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압승을 거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미-중 관계의 골격은 흔들지 않겠지만 부분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분석했음.
-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연구소 위안 평(袁鵬)소장은 4일자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는 앞으로 중국문제 등에 대해 의회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로써 중국도 미국정책을 수립하는 데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음.
- 중국은 미국 의회가 중국에 대해 자주 강경한 입장을 보인 점을 감안,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와의 협상뿐만 아니라 의회와의 대화를 늘려야 한다는 것임.



- 위안 소장은 미 정치가들이 중간선거 전에도 득표전략으로 미국 경제의 부진의 이유로 위안화 환율문제 등을 속죄양으로 삼아왔다면 서 미국의 이런 '중국때리기'는 오는 2012년 대선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음. 상하이의 명문 푸단(復旦)대 미국연구중심 선딩리(沈丁立) 주임은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는 안정된 중국을 선호하는 정책을 실시했지만 이런 정책은 이번 선거결과 확실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 선 주임은 그러나 중국의 국력이 신장되고 있고 중-미관계의 강화는 역사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선거결과 하나로 큰 이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반적인 양국관계 앞날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음.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판지서(樊吉社) 교수는 중-미 관계가 최소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1월 미국을 방문할 때 까지는 이번 선거결과로 인해 변화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음.

● 中, '美中日 다오위다오 회담' 반대(11/2)

- 중국이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갈등을 풀기 위한 미·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자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제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음.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하노이에서 미국은 중미일 3국 장관 회담을 제안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 생각일 뿐이며 중국은 현존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각종 대화·협력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지역 평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줄곧 여겨왔다"고 밝혔음.
- 홍 대변인은 "다오위다오는 중국의 고유한 영토로 이 문제를 둘러싼 중일 사이의 갈등은 중일 양국 사이의 문제"라며 미국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그는 "미국이 수 차례에 걸쳐 다오위다오가 미일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고 밝힌 것은 심각한 잘못"이라며 "미국은 이 같은 입장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음.
- 클린턴 장관은 지난달 30일 하노이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한 회담에서 다오위다오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는 미 중일 3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제안했고 일본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아울러 홍 대변인은 중일 관계와 관련해 "중일 쌍방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13~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일본이 양국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음.
- 홍 대변인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방문해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영토 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북방4도 문제는 러시아와 일본 쌍방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중국은 쌍방이 우호적으로 협상해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2일 다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국가주의적 태도가 아시아에 ‘나쁜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음. 신문은 아시아에서 국가주의가 범람하고 있다면서 서태평양 지역의 몇몇 섬을 둘러싼 분쟁이 동아시아의 관심을 협력이 아닌 배척으로 옮기고 있다고 진단하며 일본이 다오위다오 분쟁 과정에서 나쁜 사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음.

-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를 방문중인 클린턴 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3개국 외교장관 회담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회담이 성사된다면 영토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마. 미·일 관계

● 美 “쿠릴 분쟁관련 일본 지지”(11/2)

- 미국은 1일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시아-일본 갈등과 관련, 일본 지지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조속한 대립 해소를 양국에 촉구했음.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쿠릴열도의 일본명 ‘북방영토’라는 용어를 쓰며 “우리는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미국이 일본과 러시아에 쿠릴열도 문제 등 여러 사안을 두고 실제적인 평화조약 협상을 벌이라고 오랫동안 독려해 왔음.

바. 미·러 관계

● 메드베데프, 일본 총리에 서한..화해 신호?(11/5)

- 일본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전격 방문해 일본 정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4일 일본 총리에게 유화적인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음.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간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간 총리가 13~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에 초대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한다”며 “이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음.
- 메드베데프는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각적 정치·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데 APEC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이번 일본 APEC 회의의 주제인 ‘변화와 행동’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국제 금융·경제 위기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대처 방안이 도출되고, 위기 이후 아·태지역 발전을 위한 긍정적 모델이 찾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이날 서한은 자신의 쿠릴 방문으로 인한 러·일 간의 공방이 더 이상의 양국 관계 악화로 번지길 원치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음.

사. 중·일 관계

● <중·일 ‘센카쿠 비디오 유출’ 파문 차단에 고심>(11/5)

- 센카쿠(尖閣)열도(중국어명 다오위다오<釣魚島>) 부근에서 중국과 일본의 배가 충돌하는 장면을 찍은 일본측 비디오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퍼진 뒤 양국 정부가 파문을 차단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였음. 일본 정부 대변인인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영상의 진위와 관련해 “(내가) 애초 본 영상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느꼈다. 우리가 본 것과 똑같은 영상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음.
- 4일 밤부터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등에 퍼진 동영상이 지난 9월7일 센카쿠 부근 해역에서 일어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이 촬영한 비디오와 같은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시사한 것임. 스즈키 히사야스(鈴木久泰) 해상보안청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충돌시 영상과) 이번에 공개된 영상이 같은지 확실하지 않다”고 답변했음. 공개된 영상에 별다른 조작 흔적이 없는데도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이같은 발언을 하는 데에는 파문 차단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됨.
- 일본 정부는 진본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가령 (진본이) 유출됐다고 한다면 사건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며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음. 센고쿠 관방장관은 “수사자료가 나도는 것은 큰일이다. 유출됐다면 상당히 큰 메스를 대는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진위를 조사해 필요하다면 사법당국이 수사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국민감정이 악화할까 봐 비디오를 공개하지 않는다던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이슬람교 관련 테러 수사 자료 유출 사건에 이어 또 한번 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자 ‘기강 해이’에 신경을 쓰는 눈치임.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겉으로는 일본에 점잖게 충고하는 수준에 그쳤음. 중국측은 외교 루트를 통해 인터넷에 퍼진 영상이 진본인지, 진본이라면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를 일본측에 문의했다고 센고쿠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음. 하지만 추이토허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5일 자국 회견에서 “일본측에 성의가 있다면 곤란을 극복하고, (중일관계의 수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대립을 더 끌지 않으려면 동영상 유출의 파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중국측의 주문으로 들리는 대목임.



● 中日 센카쿠 선박충돌 비디오 유출 파문(11/5)

- 일본과 중국간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갈등을 촉발한 선박 충돌 사건을 찍은 비디오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음. 5일 요미우리신문과 NHK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센카쿠에서 발생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이 촬영한 비디오로 보이는 영상이 인터넷 동영상사이트인 유튜브에 4일 공개된 이후 일본과 중국의 인터넷에 급속히 유포되고 있음.
- 이 동영상은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2차례에 걸쳐 충돌하는 장면 등을 찍은 44분 23초의 영상으로, 분할돼 유튜브에 올랐으며 어선의 옆 부분에 새겨진 중국 어선 선박 이름이나 충돌 상황 등이 일본 해상보안청이 촬영한 비디오와 일치해 충돌 당시 촬영된 비디오가 누군가에 의해 통째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 해상보안청의 비디오는 일본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6분50초짜리로 편집해 지난 1일 중의원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만 제한적으로 공개했던 것으로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았음. 자민당 등 일본의 야권은 센카쿠 선박 충돌 비디오를 편집없이 모두 공개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국제사회가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해왔음. 하지만 중국 정부는 센카쿠 비디오 공개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번 동영상 유출을 계기로 다시 일본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음.
- 추이텐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일본 측에 성의가 있다면 현재의 곤란(외교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만큼 관계회복을 방해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센카쿠 선박 충돌 비디오가 인터넷을 타고 급속히 퍼지자 일본 정부는 즉시 최고검찰청(대검찰청)과 해상보안청을 중심으로 영상의 진위 파악과 유출 경위 수사에 착수했음.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확실하게 조사해 (비디오의) 유출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음.

● <中-日, 관계 개선 움직임>(11/4)

-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갈등으로 얼굴을 붉힌 지 두 달 만에 화해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의 탕자쉬안(唐家璇)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4일 도쿄에서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 등을 잇달아 만났음. 오카다 간사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방향성을 견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음.
- 탕 전 국무위원이 일본에 온 것은 지난달 29일임. 자신이 중국측 대표로 있는 ‘신(新)중일 우호 21세기 위원회’의 모임이 지난달 31일



과 이달 1일 니가타(新潟)에서 열린 것을 계기로 일본을 찾았음. 모임이 끝나고 나서도 돌아가지 않은 탕 전 국무위원은 지난 2일 일본 외무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 정상과의 접촉과 왕래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를 만나기도 했음.

-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추진됐던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간 총리의 회담이 무산되는 등 양국 분위기가 여전히 냉랭하긴 하지만, 13, 14일 요코하마(横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간 총리간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뜻을 내비친 것임. 4일 센고쿠, 오카다 등 일본 당정 주요 인사를 만난 것은 양국의 관계 개선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풀이됨.
- 앞서 일본 측도 다음 달 중순 오카다 간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10명 정도의 의원단을 중국에 보내 경색된 양국 외교관계 복원을 시도하겠다고 밝히는 등 양국이 서로 화해의 눈짓을 보내기 시작했다. 직업 외교관 출신인 탕 전 국무위원은 1998~2003년 외교부 부장(장관)을 역임한 데 이어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지냈고, 지난해 8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에 중국측 조문단을 이끌고 방한하는 등 한반도·동아시아 외교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사임.

● 中 재정부장, 日서 열리는 회담 불참키로(11/3)

-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이 오는 5일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담에 불참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3일 보도했음. APEC 재무장관 회담은 13, 14일 요코하마(横浜)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되는 것으로 전세계 21개국 장관이 참석해 최근 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담에 이어 환율 안정 등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
- 세 재정부장은 일본측에 이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겠다고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음.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일본측은 최근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양국간 영유권 갈등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음.

● <日 센카쿠 충돌 영상 찰끔 공개..中 ‘시큰둥’>(11/2)

- 일본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부근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일부 공개한 것을 계기로 갈등 원인이 중국 측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중국은 일본이 찍은 영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음.
- 일본 정부는 1일 오전 8시께 중의원(하원) 제1 의원회관에서 의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보안청이 촬영한 화면을 6분50초 분량으로 편



- 집한 동영상을 공개했음. 일본 정부는 여론을 자극할까 우려해 공개 대상을 참석 의원으로 한정했고, 마스크의 취재를 막았음. 영상 유출을 막는다며 녹음, 녹화는 물론이고 휴대전화 반입까지 금지했음.
- 하지만 일본 언론은 동영상을 본 의원들의 발언을 토대로 충돌 장면을 재연해 보여주는 등 큰 관심을 보였음.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동영상에는 멈춰 있던 중국 어선이 돌연 검은 연기를 내며 속도를 올린 뒤 순시선 뒤쪽을 들이받는 장면 등이 담겨 있음.
 - 영상을 시청한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중의원 예산위원장(민주당)은 기자단에 “어선이 순시선을 들이받는 모습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음. 야당인 자민당은 한정적인 공개 방법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영상 전면 공개를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 발 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음. 이것만 보면 동영상이 전면 공개되면 지난 9월7일 양측 배의 충돌로 시작된 센카쿠 갈등 원인이 중국 측의 도발에 있었다는 점이 명백해질 것 같지만 동영상의 한계도 처음부터 명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 장면을 공중에서 촬영한 게 아니라 일본 순시선에 탄 일본인이 촬영한 영상인 만큼 중국 어선의 갑작스런 움직임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중국 측은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막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음.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비디오 영상으로는 진실이 바뀔 수 없다. 일본 측 행위의 위법성을 덮을 수는 없다”며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중국 고유 영토인 댜오위다오 부근에서) 중국 어선에 대해 방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아. 일·러 관계

● 日 “러 대통령 쿠릴열도 추가방문 말아야”(11/3)

- 러시아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 문제로 주러시아 대사를 일시 귀국 시킨 일본이 3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에 영토 분쟁지인 쿠릴 열도를 더 이상 방문하지 말라고 촉구했음. 고노 마사하루(河野雅治) 러시아 주재 일본 대사는 이날 간 나오토 총리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 등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에 대해 브리핑했음. 마에하라 외무상은 고노 대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번 방문의 배경과 목적은 물론 러시아 측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 대통령이 쿠릴 열도를 추가로 방문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음.
- 그는 “네 개의 섬이 일본 영토라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러시아 측이) 이를 참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그는 또 고노 대사를 언제 모스크바에 복귀시킬 지와 일본이 대응조치를 취할 지 여부



는 간 나오토 총리 및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과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쿠릴열도 중 하나인 구나시리 섬을 전격 방문했으며 다음날 러시아 측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추가로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마에하라 외무상은 내주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날 의향이 있다며 양측이 견해를 교환하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를 바란다

● 리 외무 “주일 대사 소환 계획 없다”(11/3)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과 관련 일본과 러시아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일 주일 대사를 불러들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일본이 모스크바 주재 고노 마사하루(河野雅治) 대사를 소환키로 한 것과 관련 “일본 대사는 공직을 수행하는 인물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갈지 등에 대해 본국의 지시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일본의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도쿄 주재 대사를 불러들일 뜻이 없다”고 말했다. 크렘린(대통령궁) 보좌관도 이에 앞서 “일본의 자국 대사 소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주일 대사를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음.

● <日 “주러 대사 소환 아니라 일시귀국” 강조>(11/3)

- 일본 정부가 주러시아 대사를 불러들이면서 ‘소환이 아니라 일시귀국’이라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음. 3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은 2일 기자회견에서 고노 마사하루(河野雅治) 대사를 불러들이는 것과 관련, “(러시아 측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듣기 위한 것”이라며 일시 귀국이라고 말했다.
- 마에하라 외상은 또 이번 조치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남쿠릴열도 방문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본 측이 굳이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복잡한 사정이 있기 때문임. 우선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남쿠릴열도에 러시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방문한 만큼 여론을 의식하는 일본 정부로서는 가만히 있기 어렵게 됐음. 이미 러시아 쪽에서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남쿠릴열도 4개 섬 중 하보마이(齒舞)나 시코탄(色丹)을 추가 방문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 이들 섬은 구소련이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에 일본에 넘겨줄 수 있다”고 밝힌 지역임. ‘섬 2개가 아니라 4개를 넘겨달라’고 요구해온



일본으로서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하보마이 등 방문설을 듣고 ‘이러다간 아무것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에 휩싸였을 가능성이 있음.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자칫 외교관계 단절의 전 단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사 소환 조치를 취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임. 일본은 13, 14일 요코하마(横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주최할 예정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번 회의의 주요 손님 중 한 명임.

- 더구나 이번 회담기간에 일본과 러시아 양국은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와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양자 회담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일본이 강수를 꺼내 들기는 사실상 어려움.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본은 일단 주러 대사를 불러들이면서도 ‘러시아측 사정을 들어보겠다’고 강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임. 러시아측의 반응을 보가며 다음 걸음을 밟겠다는 의미임. 이와 관련해 3일자 아사히신문은 “APEC 회담이 열리는 기간에는 미국,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가 귀국하는 게 관례여서 이번 (주러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이 줄 외교적 영향은 작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의 속내를 전하기도 했음.

● 영토분쟁 격화 러.일, 정상 회동 추진(11/2)

- 러시아와 일본 간의 쿠릴열도 영토분쟁이 어느 때보다 격화되는 가운데 양국 정상이 조만간 만나는 방안이 추진 중이어서 사태 해결의 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음.
- 2일 크렘린 소식통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이달 중순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에 양자 회동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밝혔음. 통신에 따르면 크렘린 소식통은 “현재 APEC 정상회담 기간 중 두 정상이 회동하는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장애물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음. 또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 총리가 오는 13~14일 요코하마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별도의 일·러 양자간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음.
- 한편, 양국 정부가 정상회담을 통해 사태 해결을 모색하는 가운데 양측의 이와 관련한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 일본 정부는 이날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에 대한 항의 표시로 모스크바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에 앞서 간 총리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쿠릴 방문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했음.
- 이에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일본 정부의 주러 대사 소환 조치를 비난하고 나섰다. 하원 외교위원회 제1부위원장 레오니트 슬루츠키는 “일본의 주러 대사 소환은 적절치 못하며 ‘딱다른 골목’으로 가는 결정”이라며 “이 같은 조치가 일본 측에 오히려 손해를 끼칠 뿐”이



라고 비난했음. 그는 “일본 정부가 취한 부적절하고 격렬한 조치는 쿠릴열도 영유권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통분모 모색을 더 늦출 것”이라고 지적했음.

- 슬루츠키는 이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전날) 일본 측의 앞선 반응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보적) 발언을 한 것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음. 그는 “쿠릴열도는 어떤 국제법 규범을 따르더라도 러시아의 영토”라며 “러시아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의 사전 조율 없이 자국 영토를 방문할 전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 “메드베데프 대통령, 쿠릴방문 계속해야”(11/2)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쿠릴열도를 계속 방문해야 한다고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빅토르 이샤예프가 2일 밝혔음.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이샤예프 전권대표는 이날 공보실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이 지역(쿠릴열도)은 대통령의 끊임없는 관심을 필요로 한다”며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쿠나시르 외에 쿠릴열도의 다른 섬들도 방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음.
- 이샤예프는 그러면서 “쿠릴열도의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여온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주의를 기울여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쿠릴열도에 사는 주민들에게 대통령의 방문은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섬을 방문한 것은 쿠릴열도가 러시아에 정말로 필요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샤예프 전권대표는 연방 정부가 쿠릴 발전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만 80억 루블(약 2천900억 원)이 투입됐다고 소개했음. 이밖에도 “2015년까지의 쿠릴열도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많은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國後’)와 이투롭(일본명 ‘에토로후:擇捉’) 등 두 곳에 공항이 건설되고 병원과 학교, 주택 등이 추가로 건립되고 있는 것도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이샤예프는 설명했다. 전권대표는 그러면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쿠릴 방문에 대한 일부 일본 정치인들의 (격렬한) 반응은 전체 일본인들의 입장이 아니다”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절실히 원하는 일본 사업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 그는 “그동안 러시아는 일본에 많은 양보를 했다”며 “소련 당국은 당초 일본과의 영토 분쟁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지만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분쟁 사실을 인정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현 총리)은 일본인들이 무비자로 섬에 들어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 <日, 러시아 영토공세에 속수무책>(11/2)

- 일본의 정치권과 여론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쿠릴열도(일본의 북방영토) 전격 방문에 대해 ‘외교적 신뢰를 깨뜨린 행위’라고 일제히 비판했지만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음. 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1일 밤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는 정부차원의 대응책을 시사한 것임.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정치권과 여론의 격앙에 ‘부응’할만한 대응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강력한 반발의 표시로 주 러시아 일본 대사의 소환이나 일시 귀국을 고려할 수 있으나 당장 오는 13~14일 요코하마(横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 실행이 어려움.
- 국제 정상회의에 손님으로 오는 국가에 주재하는 대사를 소환해 외교적 긴장을 높이는 것은 행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기 때문임.
- ‘북방영토’ 협상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중단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는 실익이 없고 러시아를 자극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음. 일본이 향후 러시아와의 영토협상에서 내밀수 있는 카드는 경제력과 기술력밖에 없음.
- 중국의 센카쿠(尖閣 :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공세에 이어 러시아 대통령의 쿠릴 방문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위상과 외교가 위기에 처하면서 여론은 민주당 정권의 좌표없는 외교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권 출범이후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로 미일 동맹이 약화하면서 외교·안보에 약점을 보였고 이를 중국과 러시아가 파고들었다는 시각임.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러시아 대통령이 구나시리(國後) 방문을 강행한 것은 지금까지 양국의 교섭 성과를 무력화시킨 난폭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도 “중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러시아가 센카쿠 영유권 문제에서 우왕좌왕하는 일본 외교의 ‘바닥’을 읽고 흔들기에 나섰다”고 진단했음.
- 요미우리신문도 사설에서 “민주당 정권 출범이후 후텐마 문제로 미일 동맹에 균열이 생겼고, 최근에는 센카쿠 선박 충돌 사건으로 일중 외교관계가 험악해졌으나 정부는 유효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이 신문은 “러시아도 민주당 정권의 외교정책의 혼미·혼란을 보면서 일본의 북방영토 반환 요구를 견제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기축으로 하는 외교태세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주문했음.
- 마이니치신문 역시 사설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은 후텐마 문제로 미일 관계의 정체를 불렀고, 간 나오토 정권은 센카쿠에서의 선박 충돌 사건이후 중국의 외교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정권 교체후 총리가 러시아를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는 등 대 러시아 외교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이번 사태를 부른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했음. 일본의 정권이 54년만에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러시아, 중국과의 외교 파이프가 두절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음.

- 러시아의 경우 과거 자민당 정권때는 고(故)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전 총리,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중의원 등의 두터운 러시아통이 있어 정보교환과 교류가 활발했으나 지금은 외교관들에게만 맡겨두고 있다는 것임. 러시아통으로 불리던 하토야마 전 총리가 일찍 퇴진한 것도 러시아와의 소통에 문제를 일으켰음.

● 러 외무 “쿠릴 관련 일본 반응 용납될 수 없어”(11/1)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간 외교 분쟁이 한층 심화하고 있음.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쿠릴 방문을 비난한 일본을 러시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음.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일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고 러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음.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자국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쿠릴열도는 러시아 영토이며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땅을 방문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음.
- 그는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이미 일본 측에 전달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 주러 일본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할 것”이라고 밝혔음. 라브로프는 이어 “우리는 러-일 협력을 어렵게 하는 어떤 행보를 취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일본 측의 반응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음.
- 앞서 이날 이루어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쿠릴열도 방문과 관련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은 주일 러시아 대사 미하일 벨트이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음.
- 마에하라 외무상은 이어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방영토는 우리의 고유 영토로 일본의 원칙적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쿠릴 방문은) 일본 국민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음.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도 유감의 뜻을 밝혔음. 이타르타스 통신은 일본 교토 통신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러시아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메드베데프, 쿠릴열도서 러-일 관계 함구(11/1)

- 1일 전격적으로 일본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열도(일본의 ‘북방영토’)를 방문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러-일 관



- 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이 섬 안의 여러 시설을 둘러보고 주민들을 만나는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아침 쿠릴열도를 관할하는 사할린주의 주도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공항에 도착한 뒤 소형기로 갈아타고 쿠릴열도 가운데 하나인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國後)를 찾았으며 섬에 머무는 동안 일본과 관계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한 채 신설 유치원과 주거시설, 생선가공공장, 지열 발전소 등을 둘러봤음.
 - 메드베데프는 먼저 11월 중 개원을 앞둔 신설 유치원을 찾아 유치원 관계자 및 기자들과 환담하며 “교육 시설이 아주 현대적”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어 현지 주민의 집을 방문해 가족들과 차를 마시며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살도록 만들겠다”며 섬 개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음.
 - 그는 “섬의 생활 여건을 러시아 중심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제대로 된 환경이 갖춰지면 사람들이 쉬려도 올 것이고 살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음.
 - 대통령은 또 현지 생선가공공장도 방문해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공장에서 생산되는 연어알이 대륙으로 제때 운송되지 못하고 있다는 공장장의 설명을 듣고 문제를 바로잡도록 하라고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에게 곧바로 지시하기도 했음.
 - 메드베데프는 뒤이어 3년 전에 건설돼 쿠나시르 섬 에너지 수요의 40%를 공급하는 지열발전소 시설을 둘러보며 “이 같은 소형 에너지 생산 시설이 중유 등을 들여오는 것보다 아주 좋은 대안”이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에너지 효율성”이라고 치하했음.

● 러 대통령 쿠릴 방문..日.러 외교 급랭(11/1)

-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1일 아침 일본과 영토분쟁을 겪는 쿠릴열도(일본의 ‘북방영토’)를 전격 방문했음. 일본의 교도통신은 타스통신을 인용해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이날 아침 쿠릴열도를 관할하는 사할린주의 주도인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공항에 도착한 뒤 소형기로 갈아타고 쿠릴열도 가운데 하나인 구나시리(國後 : 러시아명 ‘쿠나시르’)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부는 일본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쿠릴열도 구나시리 방문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음. 러시아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은 구 소련시대를 포함해 러시아의 국가원수로는 처음임.
- 교도통신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이달 중순 요코하마(横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북방영토’를 방문함으로써 일본과 러시아의 외교관계 냉각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방영토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입장은 일관된 것으로 그 지역에 (러시아) 대통령이 왔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다”고



불만을 표시했음.

-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은 주일 러시아 대사에게 ‘유감과 함께 강력한 우려’를 표시하고 “(일본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고 경고했음.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에토로후(擇捉), 구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등 4개 섬을 일컫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는 2차대전 종전 이후 전승국인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으나 일본은 역사적으로 자국영토였다고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